

창원의회소식

열린마당

Autumn/2021
Vol.37



창 원 시 의 회
<http://council.changwon.go.kr>

시민의 눈과 마음으로 함께하는 창원시의회



창원의회소식

열린마당

Autumn/2021 Vol.37



CONTENTS

02 인사말

04 의원현황

10 의정활동

10 주요안건 처리현황

15 5분 자유발언

26 시정질문 및 답변

29 건의안·결의안

35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활동

41 의원동정

41 마산합포구 의원포커스

49 의원연구단체 활동

50 포토·뉴스광장

56 의원칼럼·기고

72 2021년도 회기 운영계획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마스크 속 유난히 무덥게 느껴졌던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바람이 기분좋은 10월입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자연이 보여주는 변화는 우리를 설레게하고 때론 경외심마저 들게 합니다.

2021년 10월 10일
노비닐수 있습니다



창원의 대표적인 가을축제인 마산국화축제가 10월 27일부터 마산해양신도시에서 개최됩니다. 얼마전 개방된 서항지구 친수공간과 어우러져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큼 다가온 가을을 시민들이 즐길 수 있게 되어 반갑기도 하지만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최근 확진자 수가 감소 추세이긴 하나, 안심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생각합니다. 마산국화축제를 비롯해 크고 작은 다양한 행사들로 외부활동이 증가하는 요즘, 위드 코로나가 될 때까지 모두의 안전을 위해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제 올 한해도 두 달 정도 남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과 추진해야 할 사업 등을 꼼꼼히 되짚어 봐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개선 보완할 사항은 없는지 점검하고 사업진척이 미진한 사업은 남은 두 달 동안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 수립에 있어서도 창원특례시 출범에 따른 행정적·경제적 환경 변화에 맞춰 우리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수립되도록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창원시의회가 시민을 대변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조언과 견제를 통해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항상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아침저녁으로 쌀쌀함이 느껴지는 시기입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모두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0월

창원시의회 의장 이 치 우

의 장 단



의 장
이치우
국민의힘
창원대선거구
(웅천, 웅동1,2동)



부 의 장
공창섭
더불어민주당
창원다선거구
(봉림, 용지동)



의회운영위원장
조영명
국민의힘
창원파선거구
(양덕1,2, 합성2, 구암1,2, 봉암동)



기획행정위원장
백태현
국민의힘
창원가선거구
(동읍, 북면, 대산면, 의창동)



경제복지여성위원장
문순규
더불어민주당
창원파선거구
(양덕1,2, 합성2, 구암1,2, 봉암동)



문화환경도시위원장
박춘덕
국민의힘
창원녀선거구
(이동, 자은, 덕산, 풍호동)



건설해양농림위원장
이천수
국민의힘
창원사선거구
(구산, 진동, 진북, 진전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 영 명
국민의힘
창원파선거구
(양덕1,2, 합성2, 구암1,2, 봉암동)



부위원장
구 점 득
국민의힘
창원나선거구
(팔룡, 명곡동)



김 상 찬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 상 현
더불어민주당
창원하선거구
(종무, 여좌동)



심 영 석
더불어민주당
창원더선거구
(웅천, 웅동1,2동)



이 종 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 헌 순
국민의힘
비례대표



정 길 상
국민의힘
창원아선거구
(현, 가포, 월영, 문화, 반월중앙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백 태 현
국민의힘
창원가선거구
(동읍, 북면, 대산면, 의창동)



부위원장
김 상 찬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공 창 섭
더불어민주당
창원다선거구
(봉림, 용지동)



김 인 길
국민의힘
창원거선거구
(태백, 경화, 병암, 석동)



김 종 대
더불어민주당
창원타선거구
(회원1,2, 석전, 회성, 합성1동)



박 남 용
국민의힘
창원바선거구
(가음정, 성주동)



박 성 원
더불어민주당
창원자선거구
(완월, 자산, 오동동)



이 우 완
더불어민주당
창원카선거구
(내서읍)



정 순 욱
더불어민주당
창원거선거구
(태백, 경화, 병암, 석동)



조 영 명
국민의힘
창원파선거구
(양덕1,2, 합성2, 구암1,2, 봉암동)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장
문 순 규
더불어민주당
창원파선거구
(양덕1,2, 합성2, 구암1,2, 봉암동)



부위원장
이 현 순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 경 희
더불어민주당
창원라선거구
(반송, 중앙, 웅남동)



김 상 현
더불어민주당
창원하선거구
(충무, 여좌동)



김 순 식
국민의힘
창원차선거구
(교방, 합포, 산호동)



박 선 애
국민의힘
비례대표



임 해 진
국민의힘
창원타선거구
(회원1,2, 석전, 회성, 합성1동)



전 병 호
국민의힘
창원자선거구
(완월, 자산, 오동동)



최 영 희
정의당
비례대표



최 은 하
더불어민주당
창원가선거구
(동읍, 북면, 대산면, 의창동)



한 은 정
더불어민주당
창원마선거구
(상남, 사파동)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박 춘 덕
국민의힘
창원녀선거구
(이동, 자은, 덕산, 풍호동)



부위원장
정 길 상
국민의힘
창원아선거구
(현, 가포, 월영, 문화, 반월중앙동)



김 우 겐
더불어민주당
창원나선거구
(팔룡, 명곡동)



노 창 섭
정의당
창원마선거구
(상남, 사파동)



박 현 재
국민의힘
창원다선거구
(봉림, 용지동)



이 종 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 찬 호
국민의힘
창원라선거구
(반송, 중앙, 웅남동)



이 해 련
국민의힘
창원하선거구
(충무, 여좌동)



지 상 록
더불어민주당
창원사선거구
(구산, 진동, 진북, 진전면)



진 상 락
국민의힘
창원카선거구
(내서읍)



최 희 정
무소속
창원차선거구
(교방, 합포, 산호동)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장
이 천 수
국민의힘
창원사선거구
(구산, 진동, 진북, 진전면)



부위원장
심 영 석
더불어민주당
창원더선거구
(웅천, 웅동1,2동)



구 점 득
국민의힘
창원나선거구
(팔룡, 명곡동)



권 성 현
국민의힘
창원가선거구
(동읍, 북면, 대산면, 의창동)



김 경 수
국민의힘
창원마선거구
(상남, 사파동)



김 장 하
더불어민주당
창원가선거구
(동읍, 북면, 대산면, 의창동)



김 태 웅
더불어민주당
창원너선거구
(이동, 자은, 덕산, 풍호동)



백 승 규
더불어민주당
창원바선거구
(가음정, 성주동)



손 태 화
국민의힘
창원파선거구
(양덕1,2, 합성2, 구암1,2, 봉암동)



전 홍 표
더불어민주당
창원아선거구
(현, 가포, 월영, 문화, 반월중앙동)



주 철 우
무소속
창원나선거구
(팔룡, 명곡동)



제106회 임시회 (7. 15. ~ 7. 22.) | 총 20건

의결목록

■ 제10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원안가결〉
■ 창원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 창원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창원시 3.15의거 발원지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수정가결〉
■ 창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창원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유흥주점영업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	〈원안가결〉
■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창원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창원시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창원도시관리계획(역사공원)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원안가결〉
■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원안가결〉
■ 충무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원안가결〉
■ 창원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창원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 창원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창원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 창원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 창원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주요안건 처리내용



창원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정 순 욱 의원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안이유

-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의용소방대의 근거지가 도심권으로 이전됨에 따라 의용소방대의 역할이 다양해지고 수요가 늘어 대시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정원 증원이 요구됨.
- 또한 창원시 의용소방대원이라면 누구나 창원시 연합회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정원 규정을 보완하여 계층 구조를 수평적 구조로 바꾸고자 함.



창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최 영 희 의원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안이유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창원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조 영 명 의원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안이유 『국민건강증진법』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경우 1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례로 위임한 바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여 음주폐해를 예방하고자 함.



창원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이 종 화 의원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안이유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지역문화의 계발·보존 및 전승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창원시 문화원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창원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심 영 석 의원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안이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교통안전 시책 추진 시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교통안전대책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창원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지상록 의원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안이유 농업 기반과 농촌 정착 여건 지원을 통하여 청년농업인이 안심하고 의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역 농업과 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창원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지상록 의원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안이유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창원시에 이주한 귀농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창원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이천수 의원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안이유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에 따라 창원시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청소년 및 농업후계인력을 창조적인 미래세대로 육성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창원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전병호 의원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안이유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활성화로 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의결목록

■ 제10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원안가결〉
■ 2021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원안가결〉
■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원안가결〉
■ 공공 법률 서비스 플랫폼 설립 및 공급 촉구 결의안	〈원안가결〉
■ 공공의료 강화 및 보건의료인력 확충 촉구 건의안	〈원안가결〉
■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 법제화 촉구 건의안	〈원안가결〉
■ 지방자치법 관계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원안가결〉
■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주변 마을 갈따구 피해 해결 촉구 건의안	〈원안가결〉
■ 칠서정수장 인근 폐기물처분시설 설치 반대 결의안	〈원안가결〉
■ 창원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원안가결〉
■ 창원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원안가결〉
■ 창원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여좌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 창원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 창원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 창원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창원시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 창원시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 창원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창원시 성호생활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 창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문화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원안가결〉
■ 창원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안	〈수정가결〉
■ 2021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가결〉
■ 2021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원안가결〉

주요안건 처리내용



창원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이우완 의원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안이유 마을미디어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창원시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을 높이고, 시민 주도적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여 민주적 의사소통과 공동체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함.



창원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이천수 의원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안이유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의 전기화재 안전시설의 설치 등을 지원하여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고자 함.



창원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구점득 의원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안이유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의 주체로서 부모가 올바른 역할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을 지원하여 건강한 가정을 위한 가족가치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함.



창원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심영석 의원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안이유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위치를 현재 운영에 맞게 개정하고 재활시설의 역할을 추가하며, 재활시설 위탁운영(재위탁)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명확히 함으로써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장애인의 자립 및 경제적 사회활동에 이바지하고자 함.



창원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박헌재 의원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안이유 도심 근거리 자연친화적인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설치 운영중인 오토캠핑장의 “사용료 감면” 규정 중 일부를 개정하고 “사용시간 초과 시 추가 요금”을 시설별 세분화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함.

제106회 창원시의회의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2021. 7. 15.(목)

2050탄소중립도시, 창원시를 위한 교통체계의 선제적 개선 방안에 대한 제안


이종화 의원

(문화환경도시위원회)

탄소중립은 기후위기의 해결 과제일 뿐만 아니라 미래의 산업과 일자리 등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아젠다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중 95%가 도로에서 발생하며, 이 중 대부분은 자가용 통행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교통체계를 승용차 중심에서 벗어나 자전거 또는 PM(퍼스널모빌리티) 활성화 그리고 도보를 선호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의 대전환과 도시 재설계 등 교통체계의 선제적 개선이 시급하게 요구된다. 이에 교통 분야에서의 장·단기적인 계획과 기본 방향이 수립되어야 한다. 첫째, 교통수단의 대전환이다. 앞으로 친환경 자동차 또는 수소 자동차와 전기자동차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므로 수소 및 전기 충전소를 확충해야 한다. 둘째, 공공교통 체계 확대와 도로의 재설계로 도시 구조를 바꿔야 한다. 수소 트램, 수소 버스 보급 확대 등 대중교통 수단의 변화로 공공 교통체계를 확대하는 것이다. 동시에 자전거와 개인 전동기 사용 활성화를 위해 전기자전거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교통기본권을 보장하고,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셋째, 시민들의 이동경로와 생활방식을 고려한 도시 디자인과 함께 도로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 우리시는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탄소중립을 위한 교통체계의 선제적 개선 방안이 수립되기를 바란다.

마을교육공동체가 살아야 창원이 산다

수도권 인구가 전국 인구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수도권에 대한 경제, 사회, 문화의 집중적인 투자로 지방의 인구 소멸과 몰락이 가속화되고 있다. 사람들이 거주지로 결정하는 핵심요소는 일자리와 교육 환경으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마을, 학교, 지자체가 마음의 벽이 너무 높아 서로 마을과 학교를 위해 협력하는 것이 안 되고 있다. 2015년 개정된 교육과정은 학교가 지역의 여건과 학생의 특성에 따라 자율적인 교육과정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 자치가 시행되었으므로 창원시와 창원교육지원청은 제도적으로 마을, 학교, 지자체가 서로 협력하여 지역도 살리고, 학교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학교는 근대 산업화시대의 획일화된 국가인재양성 중심교육에서 주민자치 시대에 걸맞게 다양한 지역인재양성 중심교육으로 교육의 방향을 바꾸어야 하고, 지역인재양성의 주체인 창원시는 창원교육지원청과 함께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마을 교육을 연구하고 지역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창원시는 본사가 수도권에 있는 초대형 기업 유치를 자제하고 창원시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로컬 기업을 육성하며, 지역인재를 양성하여 인재, 상품, 재화가 지역 내에서 선순환 되도록 하면 창원의 청년이 수도권으로 유출되지 않고, 창원에서 번 돈이 수도권으로 유출되지 않을 것이다. 끝으로 창원 지역의 인구유출과 재화의 유출을 막고 지역특성에 맞는 마을 교육공동체 육성을 위해 2022년부터 전폭적인 예산지원을 창원시에 요구한다.


심영석 의원

(건설해양농림위원회)

해양신도시를 지구촌에 공모하자



박춘덕 의원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마산해양신도시시는 마산항의 공유수면을 매립해 만든 인공섬으로 전체 면적은 64만 2천㎡, 현재 공정률은 84%이다. 창원시 최대 현안 사업인 해양신도시 개발사업 시행자 공모는 3차례나 실패하며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대폭 보완된 해양신도시 민간복합 개발시행자 제5차 사업자 선정 공모 계획을 발표했다. 보완된 공모 지침은 민간사업자 중도금 납부를 1차 10%, 2차 50%로 바꿔 민간 사업자의 부담을 낮추고, 용지매입비 배점을 100점으로 높이는 대신 용도 지역을 상업 용지로 지정한 게 핵심이다. 마산통합상인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마산 해양신도시 개발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상업지구의 개발로 일반 생활과 숙박시설, 위락시설 설치 등을 창원시가 강행한다면 창동 등 마산 원도심 상인들만 피해를 감수해야 된다는 이유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창원시는 신도시 조성 원가 3,400여억 원의 부지를 상금으로 내걸고 전 세계를 상대로 사업자를 공모한다면 발상의 전환이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있다.

3,400억 원의 시상금이 걸린 공모전을 펼친다면 이 공모전 자체로 창원시는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도시가 될 것이다. 국내는 물론 세계 유수 기업들이 해양신도시를 글로벌 테마파크로 만들 미래지향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창원으로 몰려들 것이다.

창원시는 철저한 심의를 통해 공모에 참여한 국가나 기업을 선정하면 된다. 선정된 기업은 그 기업의 발전과 함께 우리 창원시를 세계 일류 도시로 만들어 갈 것이다.

창원시는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

구산해양관광단지는 마산합포구 구산면 구북리 일대, 2,847,253㎡에 사업비 5,113억 원으로 공공 333억 원, 민자 4,780억 원을 들여 골프장, 숙박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창원시가 해당 사업부지의 토지를 매입 중에 있다. 창원시와 민간사업자가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강제 수용을 승인받아야 하며 세 차례에 걸쳐 협의 요청을 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시행자의 의사와 능력, 공익 우월성 및 수용 필요성, 공익의 지속성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해 부동의 의견을 통보했다.

그리고 환경단체와 조성계획 변경을 협의하면서 법정 보호종인 갯게와 기수갈고동, 찰피 등의 서식지 주변은 원형녹지를 보호하기 위해 생태보전 1등급 지정 검토 등 이곳을 보전하기 위한 모든 제도를 검토한 보전방안을 요구했다.

창원시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기후위기 문제를 선도하는 모범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면서 자연녹지를 훼손해, 법정보호종의 서식지를 파괴하는 골프장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발언은 어느 것이 기후위기 시대에 타당한 것인지 시민들에게 분명하게 밝히기를 바란다.

기후위기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점에 건설업체 배불리기 식의 개발 사업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세 차례 부적격 내린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은 공공성 강화 방안 마련과 사업전반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



노창섭 의원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자치법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올바른 조례 정비 제언



박 성 원 의 원
(기획행정위원회)

창원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제정된 조례는 상당수 누구 하나 따지고 물어보지도 않았으며 검색도 하지 않았다. 그 대상은 통합 창원시 제1대~제3대까지 발의된 조례 중 상위 5개 부서와 그 외 총 223개의 조례이다. 조례 발의와 제정을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았으나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조례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주민을 더 불편하게 하지는 않는지, 현 사회 변화를 잘 반영하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 창원시는 조례의 정비 필요성과 미흡한 점은 보완하고 개선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이는 급변하는 사회 환경 등을 반영하지 못해 자칫 조례가 법령 위배 혹은 불필요한 규제 등으로 지역 발전 저해와 주민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시도 꾸준히 중앙정부와 협업하여 불합리한 조례 등을 정비해 오고 있으나 상위 법령에 맞지 않는 조례의 발굴부터 정비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신속한 조례 개정에는 한계점이 있다. 조례는 사후 관리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장기간 개정하지 않아 현실에 맞지 않거나 실효성이 없는 조례는 정비해야 한다.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조례를 점검하고 현행 법률 범위의 적정여부를 파악하여 법률 적용의 현실성을 검토해야 한다. 현행 법률의 적용에 맞춰 개정 사항은 개정하고 미비 점을 보완하고 아울러 폐지가 필요한 조례는 폐지하고 새롭게 정비해 자치 법규의 입법 효과성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야 한다. 이로써 시민의 권익 증진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시민은 스타필드의 축소를 원하지 않는다

창원은 한때 기계공업의 요람으로 국가 기간산업을 선도했고 마산은 전국 7대 도시로 손꼽히는 항만과 경제의 중심지였다. 진해 또한 군항의 도시이면서 관광지로 널리 알려진 도시였다. 이러한 3개 도시가 통합한 이유는 경쟁력을 잃어가면서 쇠락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였다. 창원국가산단을 재구조화하고, 마산과 진해의 오래된 도심에 재생의 숨길을 불어 넣고 있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물결을 따라 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팽배하다.

외지 친구에게 추천하려 해도 창원 하면 딱히 떠오르는 것이 없다.

그나마 창원에 스타필드라는 멋진 시설이 들어선다면 이곳을 소개하고 주변의 소소한 관광지와 연계한다면 분명 경쟁력이 있겠다는 생각에 부풀어 있었다. 고양과 하남의 스타필드 규모와 비교하면 면적이 작아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는데, 얼마 전 지하 1개 층과 지상 2개 층을 축소한다는 기사를 접하고는 크게 실망했다.

모든 일과 사건에는 양면이 존재한다. 대형시설이 들어와 스포츠, 문화, 쇼핑 등의 욕구를 충족하는 것도 시민이 누려야 할 권리다. 그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량 증가는 당연한 일이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고 또 해결해 나가는 것이 행정의 책임이며 능력이다. 이에 통합 창원의 도시 규모와 위상에 걸맞는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 부디 우리 창원이 도시의 경쟁력을 갖추고 젊은이가 찾아오고 살고 싶은 도시, 희망을 주는 도시가 되도록 재검토해 달라는 당부를 한다.



구 점 득 의 원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노후화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개선합시다



전 홍 표 의원
 (건설해양농림위원회)

하수관거시설은 공중위생과 공공수역의 수질 보전 등을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인 유지 관리가 필요한 도시기반 시설이다.

그러나 최근 하수처리시설은 주변이 개발되고 도심에 위치하는 등 도시화가 진행돼 대표적인 혐오 시설로 인식되어 각종 민원 발생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하수도 관련 민원 조사결과, 악취 민원이 전체의 절반 이상인 59.3%를 차지했다. 특히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220에 있는 제4 펌프장은 각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덕동하수처리 시설로 1993년 설치·운영해 왔다. 하수 처리를 위한 운송 과정에 있는 중계펌프장과 하수처리장 인근은 악취로 불편함을 겪고 있다. 이곳엔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며 서향친수공간으로 곧 개방될 곳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에서 손꼽힐 멋진 해변 친수 공간이 들어설 곳이라 조속한 악취 저감 시설과 펌프장 시설 개선이 요구된다.

이에 창원시는 1993년 준공된 덕동하수처리장 시설의 내구연한 30년 경과에 대비 하고 마산만 수질개선을 위한 완벽한 하수처리 능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보건·위생을 보다 철저히 관리하는 차원에서 노후화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또한 하수처리시설을 주민 친화시설로 전환하여 도심지 인근 주민의 생활 및 편의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 전환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스포츠 문화도시 창원에서 스포츠영화제를!

설기현 감독이 이끄는 경남FC는 창원을 홈구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선수단 클럽 하우스도 창원으로 옮길 예정이다. 창원LG세이커스가 창원의 중심에 있으며 2020년 KBO리그와 한국시리즈 통합우승을 차지한 NC다이노스도 창원을 연고로 하고 있다. 이렇듯 창원시는 명실상부 스포츠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 창원시의 이런 좋은 조건과 환경을 살려 특례시의 위상에 걸맞는 국내 유일의 스포츠 영화제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

스포츠는 이제 그저 운동경기가 아닌 하나의 문화가 되어 바쁜 삶을 사는 현대인들의 스트레스 해소 수단으로 스포츠 관람은 시민들의 취미가 되어 시민들의 삶에 녹아 있다. 또한 스포츠 시장은 이제 비즈니스화되어 스포츠로 창출되는 경제효과와 그 파급효과는 나날이 더해 가고 있다.

또한 스포츠는 각국의 팬들이 함께 모여 응원하고 즐기는 장이 되어 세계화를 이루 었다. 스포츠 강국, 스포츠 문화 강국인 미국 역시 십여 년 전부터 이러한 스포츠 문화를 키워 스포츠 영화제를 열고 있으며 이탈리아와 유럽에서도 스포츠 영화제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젊고 활력이 넘치는 창원시!!!

스포츠 영화제를 개최해 국내외 스포츠 스타들이 창원에 모인다면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창원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된다.



지 상 록 의원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시정에 지역특성을 고려한 민감성이 필요하다!



박 선 애 의원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TF팀을 꾸리거나 여러 가지 대응책을 모색할 때 지역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마산합포구는 해양신도시 조성, 창원 국립현대미술관 유치, 로봇랜드를 비롯한 마창대교 통행로 인하와 송전탑 건설 문제, 노인 인구 21.7%인 초고령 지역이라는 점 등 많은 현안들을 안고 있다.

지역마다 산재한 현안들이 많고 그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진정성과 민감성을 가지고 지역특성을 고려해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면 시정 효과는 배가 되리라 생각한다.

얼마 전 도내 최초 어르신 놀이터가 성산구 반송공원에 개소했다. 성산구는 5개구 중에서 노인인구가 8.7%로 가장 적은 곳이다. 만약 사업추진 시 지역특성을 감안한 민감성과 진정성을 가지고 고심했다면 4.5명중 1명이 노인인 마산합포구에 어르신 놀이터를 유치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했다.

노인여가시설과 관련, 최근 노인층이 가장 선호하는 스포츠인 파크골프장은 진해구 3개, 의창구 2개, 회원구 1개로 성산구, 합포구는 전무하다. 노인인구가 가장 많은 합포구에 이러한 시설 하나 없다는 것은 고령친화정책을 추진하며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어려운 시기, 예산은 한정되어 있지만 지역특성을 감안하되 민감성과 균형감각을 정책에 가미하여 진정성 있는 시책을 펼쳐나가 주시길 당부한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 신중해야

창원시는 지난 5월 7일부터 '창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번 용역은 3억 3800만 원에 달하는 용역비를 투입, 12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창원시는 이번 연구용역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 단지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리모델링 활성화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연구용역을 보며 속도전보다 신중론을 건지하는 입장에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리모델링은 법적 근거 미비, 낮은 현실성 등이 분명하게 존재한다. 어떻게든 리모델링 기본 계획안을 수립하려는 데 초점을 둔다면 주민들의 기대감만 높이고 실현은 할 수 없으므로 신중해야 한다.

특히 현 정부는 민간 재건축 사업만큼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규제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 기본계획안 수립조차 부동산 시장에 무리한 추진 신호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리모델링 사례 또한 매우 드물다. 서울 지역에서 딱 1곳에 그치고 있으며 인접한 부산시는 이제야 논의가 시작된 수준이다. 리모델링은 지자체 입장에서 실익이 없으며, 리모델링으로 인한 결과물을 보자면 지자체가 해당 업체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이익의 사유화'이자 '특혜 시비'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우리시가 기본계획안 수립 용역부터 추진하는 것은 속도전에만 골몰하는 행정이다. 현실성 낮은 정책 추진으로 시민들에게 불신감만 증가시킬 수 있는 결과를 낳을 게 아니라 구축 공동주택의 현실적인 개선방안에 대해 창원시가 신규 정책을 만들어 내고 적극 지원해야 한다.



김 우 겐 의원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월영동 다 죽이는 고압 송전탑 송전선로, 절대 안 됩니다!



정길상 의원
 (문화환경도시위원회)

한전이 '154kV 서마산 분기 송전선로 증설사업'을 위해 월영마을 청량산에 고압 송전탑을 세우고 마린애시앙 부영아파트, 특히 고운초등학교 땅 밑에 고압 전선을 매설한다. 이에 강력히 반대한다. 한전이 송전탑, 송전선로 공사를 강행한다면 월영마을 4천 2백 세대, 마린애시앙 4천 3백 세대를 포함한 월영동 1만 6천 5백 세대, 4만 2천 명 주민들이 인체에 해로운 고압 전자파에 여과 없이 노출될 것이다.

특히 마린애시앙 부영아파트에는 금년 3월 개교한 고운초등학교가 있다. 우리의 미래를 열어갈 소중한 아이들이 공부하고 뛰어노는 학교를 주민들, 학부모와 어떤 협의체 구성이나 논의도 없이 고작 1.4m 깊이의 고압 전선으로 휘감으려 한다.

또한 수많은 시민들이 찾는 심터인 청량산에 괴물같은 송전탑과 가공선로가 들어선다면 전자파로 인한 각종 질환과 피해가 속출할 것이다. 그런데도 한전은 송전탑 건설을 기정사실화 하면서 송전탑 증설에 동의한 적도 없는 월영마을 주민들에게 토지수용 보상 절차에 응하라며 독촉하고 있다.

월영마을 송전탑, 마린애시앙 고운초등학교 지중선로 절대 안 된다! 한전이 기어이 송전탑을 세우고 고압 전선을 땅 밑에 깔겠다면 청량산 터널 뒤편에서 해안도로 쪽으로 돌려 변압소로 이어지는 경로로 추진해 주민들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월영동의 미래를 위협하고 주민들의 생존과 건강, 재산권을 침해하는 한전의 폭거를 막겠다. 월영동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송전탑, 송전선로를 막아주길 당부한다.

제10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2021. 9. 6.(월)

창원시와 의회는 '창원시 자체 재난지원금' 편성해야

2021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총 4177억 7,611만 원 증액해 제출했으며 이중 661억 900만 원이 보통교부세이다. 보통교부세는 지자체에 편성 자율성을 주어 일명 '꼬리표 없는 예산'으로 불린다. 본질적으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성격의 이번 추경은 보통교부세 증액분 전액을 코로나19 피해 지원 및 손실보상 성격으로 써야 한다.

창원시가 이번 2차 추경 예산안을 통해 부담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사무관리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합쳐 224억 7,741만 6,000원에 불과하다. 보통교부세의 1/3 수준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출 규모를 감안하면 창원시는 자체 재난지원금 방안을 강구했어야 마땅하다.

경남의 수부도시 창원이야말로 선제적으로 나서 '자체 재난지원금' 요구를 했어야 하며 지금이라도 의회가 나서 '창원형 재난지원금'을 만들어야 할 때이다.

우리 시의회도 자체 여야 TF를 구성하고 재난지원금 등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창원시의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은 문재인정부의 '적극 재정운용' 정책에 역행한다. 이번 2차 추경예산안은 증액률이 10.95%나 되며 보통교부세 증액분이 약 661억에 달함에도 문재인정부에서 지자체에 요구하는 적극 재정운용과 지방재정 방향에 부합하는 모습이 없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초당적으로 '창원형 재난지원금 신설 추진을 위한 TF'를 정식으로 제안한다.



김우겸 의원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진해 서부지역 활성화를 위한 전담 조직 TF팀을 구성하자



김상현 의원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현재 진해 구도심에는 충무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진해군항상권 르네상스사업, 진해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사업 등 크고 작은 사업이 진행되거나 진행 예정으로 막대한 혈세가 투입된다. 첫째, 충무지구 도시재생은 도시재생과에서 창원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위탁을 주어 주민 협의체와 함께 진행하고 있다. 둘째, 군항상권르네상스는 경제살리기과에서 창원시 전통시장 활성화재단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셋째,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사업은 문화유산육성과에서 준비중이다. 진해 구도심 충무동, 여좌동 구 태평동, 중앙동은 관공서와 해군 부대 일부 이전으로 계속 쇠퇴해가고 있으며,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힘들어 하고 있다. 여러가지 도시재생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정작 그 지역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위기 속에 도시재생, 상권활성화,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사업이 3개과 3개국 각각의 부서에서 추진되고 있다. 사업추진 부서의 통합으로 사업의 효율적인 진행과 사업의 연속성, 지역민의 소통 창구 단일화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한다. 그래서 3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전담(통합) 조직 설치를 인사조직과에 강력히 요청한다. 특히 문화유산육성과의 근대역사문화 공간 재생활성화 사업은 문화재청 최종 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내년부터 종합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될 예정이므로 그 필요성이 더욱 높아 보인다. 예산의 중복 사용을 피하고 유사 사업은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집행해야 한다.

창원시의 코로나19 대응과 남창원농협 집단감염 사태에 대하여

지난 8월 2일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남창원농협 집단 감염자가 9월 3일 기준 창원 58명 포함 경남 전체 73명이고 20대 기저질환자가 사망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그러나 남창원농협은 2일 매장 직원 중 확진자 발생을 확인하고도 영업을 중단하지 않았다. 확진자가 13명이 더 나온 이틀 후인 4일에야 휴업 조치를 재차 권고하는 데 그친 창원시 책임도 크다. 창원시가 서둘러 행정명령을 발동했다면 확진자 연쇄 발생,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무더위 속 2만 명이 넘는 시민들의 임시 선별검사소 운집 등 방역 위기 심화나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과 지역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피해는 막을 수도 있었다.

남창원농협 집단감염 사태를 두고 창원시와 남창원농협 간의 책임 공방도 뜨겁다. 창원시와 남창원농협의 시시비비를 떠나 시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시민들을 대하는 창원시와 남창원농협의 태도이다.

창원시는 7월부터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활동이 커지는 등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맞고 있음에도 선제적 대응을 하지 못했고, 대형마트 등도 방역 기강이 해이해진 결과이다. 이번 남창원농협 집단감염 사건을 계기로 창원시의 방역체계를 뿌리부터 점검하고 역학조사관 추가 선임 등 종합적인 대응 태세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시는 시민들에게 남창원농협 사태에 대해 약속한 조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노창섭 의원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집중호우 때마다 반복되는 오수맨홀 월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촉구합니다



이 우 완 의 원
(기획행정위원회)

내서읍 광려천 산책로의 오수맨홀은 집중호우 때마다 오폐수가 넘치는 문제가 여러 해 동안 반복되고 있다. 내서읍 중리와 호계리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모아 호계펌프장으로 보내는 오수관이 광려천 산책로를 따라 묻혀 있는데, 비가 많이 오면 오수관으로 빗물 등이 유입되어 오폐수의 양이 급격히 증가한다. 이렇게 증가한 오폐수를 호계펌프장에서 다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빗물이 섞인 오폐수는 맨홀 뚜껑을 들어올리고 솟구쳐 나오고 있다. 이렇게 솟구쳐 나온 오폐수는 광려천으로 흘러들어 낙동강으로 간다. 뿐만 아니라 비가 그치고 월류가 멈추면 맨홀 주변에는 오물로 범벅이 되어 심한 악취를 풍긴다. 오수맨홀 월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수관으로 유입되는 불명수의 원인을 찾아야 하는데, 네 번의 여름이 지나는 동안 아직도 그 원인을 못 찾고 있어서 참담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담당부서의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보다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비가 그치고 월류가 멈춘 뒤에야 현장에 나올 것이 아니라, 오수맨홀의 월류가 일어나고 있는 그 시점에 현장에 나와 원인을 찾는 적극성을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월류하는 오폐수의 탁도의 정도, 유입되는 불명수에 흙탕물 유무, 광려천 수위와 월류하는 오폐수의 양과의 상관관계 등 생생한 현장 정보야말로 오수관으로 유입되는 불명수의 원인을 찾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다.

개통 3년 된 팔룡터널! 교통량 저조 해소방안으로 출·퇴근 시간 통행료를 50% 할인하자

팔룡터널은 총사업비 1,665억 원을 투자해 길이 3.97km로 2018년 11월 개통하여 3년이 되어가고 있다. 팔룡터널 개통시만 해도 교통량 분산으로 간선도로 교통 혼잡이 개선되고, 옛 마산과 창원의 균형 발전을 견인하는 '소통로' 역할을 해 줄 것이라는 기대가 매우 컸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이용실적은 아주 저조해 계획 당시 예측한 하루 평균 교통량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집행기관 분석에 의하면 창원시 인구가 터널을 계획할 때보다 약 73,000여 명 감소하였으며, 코로나와 프로야구 무관중 경기로 교통량이 감소해 불가항력적인 상황 변화에 따른 현상이라고 한다. 하지만 팔룡터널의 편익은 비용에 비해 크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이 기존의 길을 고수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차량 운전자에게 편익은 시간 단축과 유류비 절감이나, 실제 계산을 해보면 유류비 절감액이 통행료보다 적다. 따라서 시민들이 팔룡터널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려면 편익을 키우거나 비용을 낮추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편익을 키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경우 대부분은 비용을 낮추는 방법, 즉 통행료를 할인하는 방법을 택한다. 통행료 할인에 따른 재정 부담은 출·퇴근 시간대 기준으로 통행료 50%를 할인하면 연간 약 5억여 원 정도이다.

우리시는 교통혼잡 개선, 공해 예방,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팔룡터널 건설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예상치 못한 장애물을 만났다. 통행료 할인은 그 장애물을 제거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감당해야 할 추가 비용이다.



조 영 명 의 원
(기획행정위원회)



마산해양신도시! 구도심과의 동반성장, 상생발전을 기대한다



문 순 규 의 원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지금까지 해양신도시 개발문제는 첨예한 지역갈등의 불씨가 되어 왔다. 그 갈등은 해양신도시 개발이 구도심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고 구도심을 퇴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시민들의 깊은 우려 때문이었다. 지난 시기 해양신도시 개발사업의 역사는 구도심과 동반성장, 상생발전 할 수 없는 개발사업은 시민적 동의를 구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구도심 상인들의 걱정과 우려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심사과정에서 반드시 숙고해야 할 사항이 있다.

첫째, 민간사업자의 개발계획에 구도심의 상권을 위축시키고 붕괴시킬 수 있는 상업시설의 과도한 밀집, 스타필드와 유사한 대규모 복합쇼핑몰의 입점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공동주택의 건립도 적정규모로 반드시 제한되어야 한다.

둘째, 민간사업자의 개발계획에는 창동, 오동동 등 구도심과 인근의 어시장 등 전통시장과 동반성장, 상생발전 할 수 있는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창원시는 민간사업자가 제시하는 계획뿐 아니라 마산해양신도시 개발로 인한 관광효과가 구도심 발전으로 이전되고 극대화될 수 있도록 별도의 <상생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것을 제안드린다.

셋째, 민간개발사업이 공공개발 영역인 한국전통정원, 돌섬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무분별한 난개발을 지양하고 공공성이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마산해양신도시에 수많은 관광객이 찾아와 마산지역 구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동반성장, 상생발전의 새로운 거점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

제10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 2021. 9. 15.(수)

아동학대 범죄가 없는 창원을 만들자!

2021년 창원시 아동학대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창원시의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2019년 373건, 2020년 432건, 2021년 6월 말 현재 294건으로 매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정 내 아동학대 발생의 위험이 커지고 있지만 대면 조사나 상담이 어려워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부부 싸움, 가정폭력, 돌봄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있으며 아동학대의 위험성이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이번에 개소한 창원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전문성과 접근성을 토대로 지역사회 내의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해 줄 실마리가 될 수 있다. 또한 아동학대는 초기대응뿐만 아니라 예방도 중요하므로 인력충원, 역량강화 등을 위해 정책적 관심과 예산 지원을 당부한다. 아동학대는 더 이상 가정 내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의 문제이자 명백한 범죄행위이므로 부모 또는 양육자가 아동을 학대할 경우 국가의 공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공공 중심 아동보호 체계 조기 정착과 창원시의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해 아동보호 전담공무원 추가 배치, 학대 피해 아동 쉼터 확충, 시민 대상 아동학대 예방 교육, 돌봄 사각지대 해소 등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문제 해결 정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 아이들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것이며, 아이들은 창원시 행정의 거울이다. 창원시 정책이 아이들의 미래에 그대로 투영되는 것이다. 아동친화 도시에 발맞춰 창원시의 아이들이 건강하고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관심을 부탁한다.



전 홍 표 의 원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진해루 앞 버스킹 무대 보강 공사》 제안



이 중 화 의원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진해루 주변의 해변 공원은 지역민뿐만 아니라 창원시민, 나아가 진해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널리 알려진 명소다. 최근에는 창원시가 이 일대를 벚꽃, 나무, 동물 포토존 등 아기자기한 빛 조형물과 미디어 파사드를 설치하여 야간에는 가족 단위로 찾아오는 분들이 더 많아졌다. 특히 이곳에서 진행되는 일련의 예술 공연들은, 그동안 바깥 출입이 자제되어 몸과 마음이 지쳐있던 시민들에게 드넓은 바다 경치와 더불어 음악으로 마음의 평온을 찾게 하는 힐링의 장소가 되고 있다.

2020년 작년 한 해, 진해구청에 개인과 단체가 사용승인을 신청한 공연이 약 100여 건이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실제 공연은 40개 팀이었다. 하지만 야간과 주말에는 버스킹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가 열려 방문자가 늘고 있는 추세이다. 내년 1월, 속천 해안도로를 확장하고 노상주차장 83면이 완공되면 이 지역을 찾는 시민 또는 관광객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비하여 진해루 앞 공연장 시설 보강이 필요하다. 증가하는 관광객이나 시민을 위한 보다 나은 공연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06년 목재로 설치되어 15년이 지난 공연시설을 개선해야 한다.

아울러 출연자 대기실이 없어서 인근의 공중화장실에서 의상을 갈아입거나 관객들 앞에서 대기해야 하는 등 공연예술 활동을 진행하기에는 열악한 환경이다. 안전성 문제도 잠재되어 있다. 전시와 공연을 즐기기 위해 모인 시민과 공연예술가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무대 시설의 안전성을 진단하고, 문화예술 향유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보강 공사가 필요하다.

자살예방을 위한 공공시설물의 안전시설물 설치!

창원시의 2018년 기준 한해 자살사망자 수는 통계청 기준 289명으로, 코로나19 사망자 수보다 무려 100배에 가까운 수치이다. 창원중부경찰서 보고에 의하면 20년 6월에서 21년 5월까지 창원중부서에만 473건의 자살신고가 있었으며 최근 들어 특히 봉암교에서의 투신 자살시도가 증가하고 있어 창원시 투신자살 사망자 증가가 우려된다. 이에 창원중부서는 투신시도가 증가하는 봉암교에 안전시설물 설치 관련, 행정협조를 요청했으나 예산편성의 근거가 부족하여 애로가 있었다. 창원중부서는 지난 7월 '봉암교 자살예방 관련 조례 개정 간담회'를 통해 서울시 조례를 예로 들어 창원시 조례에도 '자살수단 통제' 문구를 넣어 개정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자살예방으로 창원시민의 존엄한 생명권도 지키고 점점 감소하는 창원시 인구 정책에도 일조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한다. 먼저 봉암교를 비롯한 투신사망 사고 위험이 있는 공공시설물, 특히 교량을 중심으로 안전장치시설물을 우선 설치해 줄 것을 건의한다. 마창대교는 개통 초기 아름다운 절경을 차에서 내려 감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지만 얼마 안가 자살대교로 불릴 만큼 투신자살이 증가해 결국 차량 정차를 금지하고 CCTV 설치와 교각 전체에 안전장치를 설치했다. 다음은 창원시 자살예방 조례(창원시 시민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재개정에 따른 협조와 자살예방 관련 예산편성 시 집행부의 적극적 자세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는 예산부족을 논하기에 앞서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무엇보다 소중한 인간의 생명과 직접 관련된 일이라 시급성과 필요성에서 우선 순위에 두고 적극적 정책을 펼쳐주시길 당부한다.



박 선 애 의원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마산해양신도시 함께 고민합시다!



박춘덕 의원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마산해양신도시는 1997년 12월 마산항 광역개발 기본계획 수립 후 2020년 12월 제4차 공모까지 차례로 실패했고 지금은 제5차 공모 중이다. 마산통합상인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마산해양신도시개발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상업지구의 개발로 일반 생활과 숙박시설, 위락시설 설치 등을 창원시가 강행한다면 창동 등 마산 원도심 상인들만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이유로 강력 반발하고 있다. 또한 해양신도시 사업은 각종 의혹이 난무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창원시의 대외 위상과 신임도에도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이제 사업을 서두를 이유가 없고 창원시민 모두 공감하는 사업이라고 인식될 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지금껏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것에 대해 냉정한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 그 핵심은 지금껏 투입된 돈을 회수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해양신도시 사업에 3,400억 원의 시상금이 걸린 공모전을 전 세계를 상대로 펼쳐 나가자. 그 자체로 세계 주목을 받는 도시가 될 것이다. 지난날 창원시는 시민 염원을 담아 진해글로벌테마파크 유치에 경남도와 함께 유치전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글로벌테마파크는 6성급 호텔, 카지노, 컨벤션, 쇼핑몰, 대형영화관, 수상 레포츠 시설과 골프장 등으로, 추정사업비 3조 5천억 원에 생산유발 효과는 9조 5천억 원, 부가가치 4조 원, 고용유발 효과 10만 명이다. 글로벌테마파크 유치 경험을 발판으로 도전하자. 도전하면 성취할 수 있다. 발상의 전환으로 마산해양신도시를 창원 특례시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사회환경 조성이 우선

우리나라는 지난해부터 인구감소에 접어들었다. 2020년 기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합계 출생률은 0.84명으로, 유엔보고서에 따르면 2년 연속 세계 꼴찌이다. 창원시도 0.90명으로 감소 추세이다. 이런 초저출산 구조 속에서도 수도권 인구집중 비율은 50%를 넘어 지방 인구는 더욱 감소하고 있다. 이에 창원시는 결혼을 망설이는 청년들을 위한 획기적인 경제적 지원 방안으로 '가칭 결혼드림론'을 발표한 바 있다. 지방 인구감소에 따른 위기감이 표출된 정책으로 많은 찬반 논란이 있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은 국가 전체의 인구는 그대로 둔 채 지역 간 경쟁 구도만 부각하는 제로섬 게임에 불과하다.

주거, 환경, 보건, 안전, 경제 등 자녀를 키우기 좋은 근본적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효과적인 정책이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는 맞춤형 일자리, 돌봄 서비스 제공으로 행복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아이 키우기 좋은 행복한 사회 환경 조성에 대한 정책을 제안한다. 첫째, 취학아동 감소에 의한 구도심 폐교 활용방안이다. 도시재생 목적으로 '주거&보육 복합단지'를 조성해 1층은 어린이집, 2층은 유치원, 3·4층은 초등학교, 5·6층 또는 기타 공간은 주거시설로 재구성해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공급하고, 출생 수에 비례해 공간을 넓혀주자. 다음은 보육청과 보육지원청 신설로 여성가족부와 여성가족 업무에서 완전히 분리해 전문화된 보육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것이다. 인구문제, 어렵다. 하지만 창원시의 정책이 잘 연계·추진돼 '일하며 아이 낳아 키우기 행복한 창원시'가 되기를 기대한다.



박남용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제10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2021. 9. 10.(금)



구 점 득 의 원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창원 레포트파크 운영과 상임이사 임명에 관한 건

Q 지난 3년간 창원레포트파크의 인력현황과 매출현황은?

A <기획예산실장> 정규직·공무직을 포함해서 2019년 329명에서 2021년에는 8월 기준 255명으로 점진적으로 감축하고 있다. 매출액 현황은 2019년에는 2,750억 원, 2020년에는 1,064억 원, 올해 8월 31일 기준으로는 486억 원이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휴장일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매출이 크게 감소할 수밖에 없었다.

Q 부산, 광명과 비교해도 매출 악화가 심한데, 경영수지 악화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A <기획예산실장> 8월 1일부터는 온라인발매가 시작되어서 영업장 무관중 경주의 경우에도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경영수지가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영혁신을 통해 인건비와 운영비를 절감하는 등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Q 인건비 감축을 위해 인력을 계속 줄이고 있는 것이 방안이라고 하는데 한 가정의 가장이면서 직장인이 그 직장을 잃었을 때 우리 창원시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더 크다고 생각된다.

A <기획예산실장> 지난해 50명 정도 인력 구조조정을 했으나 앞으로는 자연감소분을 최대한 활용해 억지로 하는 인력조정을 지양하겠다.

Q 지난 5분 발언에서 퇴직자가 공기업에 취업하고자 할 경우 임금피크제를 적용해 공기업의 적자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채용된 상임이사 연봉도 피크제를 적용했는지?

A <기획예산실장> 상임이사는 외부에서 공개모집으로 채용된 임원이다. 그렇다 보니 그 전에 다른 기관에서 받던 급여를 바탕으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기에는 레포트파크 인사보수체계가 상이해서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참고로 정년이 적용되는 창원 레포트파크 직원에 대해서는 이미 2016도에 이 제도를 도입해서 적용하고 있다.

Q 고객의 감소로 고용인원에 대한 문제와 경륜장에 차츰 고객이 줄어들어서 큰 건물에 유휴공간이 늘어나고 있는데 인력 및 시설의 효율적 운용방안은?

A <시장> 레포트파크 유휴시설로 자전거 문화센터가 있다. 하지만 국가산업단지 내에 있기 때문에 건물의 용도가 문화 및 집회시설 외에 타 용도로 사용시에는 도시계획법을 바꿔야 된다. 이 유휴공간을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다각적으로 잘 검토해서 유익하게 쓸 수 있도록 하겠다.

Q 몇 해 전부터 매출이 급격히 줄면서 발매 건수도 확실히 줄었으며, 매점 하루 매출도 급감하고 있다. 앞으로 대책은?

A <시장> 경륜사업 매출 및 고객감소에 따라 투표발매원의 정년퇴직 인원 등을 고려해 기존 유인투표소를 무인 투표소로 점진적으로 전환하여 운영할 계획이고, 매점은 지금 현재 5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2개로 통폐합하고 유휴인력이 있으면 전환배치 할 예정이다.

Q 상임이사 인사에 역할은 어디까지이고 이 인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지?

A <시장> 레포트공단 인사는 인사위원회가 있고, 이사장이 추진한다. 인사위원회를 꾸리는데 시에서 1명 위원을 추천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다. 또한 우리 시의회에서 2명의 인사위원을 추천하며, 나머지는 도의회와 도가 추천한다.

Q 지난 3년간 불어나는 적자 등 어려운 상황을 감안할 때 상임이사 채용에 경륜 비전문가를 채용한 이유는?

A <시장> 레포트파크 이사장은 관련 분야 최고 전문가이며 상임이사도 고위공직자 출신으로 그에 적합한 인사라고 본다.



최영희 의원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창원시 산하기관 채용 문제점 지적과 NCS 직무능력기반 공공기관통합 채용 제안

- Q** 복지재단 1~4차까지의 채용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와 개선이 필요한 점은?
- A** <복지여성보건국장> 채용과 관련해 지금 파악중이며, 채용 절차에 투명성과 공정성이 증대하도록 적극 검토 하겠다.
- Q** 관내 사회복지사가 1,913명으로 민간 컨트롤타워 기능을 위해 복지재단을 출범했다. 종사자가 대거 지원을 했지만 일반직 자격기준을 무경력으로 둔 이유는?
- A** <복지여성보건국장> 9급 채용의 경우 고졸 이상으로 자격 기준을 뒀다. 1차는 서류심사로 자격기준만 확인 하고 2차에서 면접시험으로 채용했다.
- Q** 시 산하기관 4곳이 서류점수 60점 이상만 면접에 올리 는데 복지재단은 1차 서류심사에서 서류점수 배점을 따로 안하는 것은 이상하다.
- A** <복지여성보건국장> 채용 기준 및 절차는 기관마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다.
- Q** 복지재단 채용시 3, 4차 채용공고는 서류배점을 통해 20배수로 뽑기로 했으나 모두 면접에 올린 이유는?
- A** <복지여성보건국장> 타기관 및 복지재단과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
- Q** 특정직급의 경우 다수의 유경력자가 왔음에도 경력별 배점을 안줘 무경력자가 선발됐다. 선발기준 5개중 경력 및 전문지식 20점 공개해야 한다.
- A** <복지여성보건국장> 개인정보법으로 공개할 수 없으며 심사위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 Q** 해당 직급에 넘치는 고스펙을 뽑아야 한다는 게 아니라, 일반 공기업이 아닌 복지재단이므로 유관 경력자가 우선돼야 한다.
- A** <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 분야는 보편적 복지로 확대 되어, 일상생활 모든 분야가 복지대상인 종합복지라고 생각한다.
- Q** 연구직 심사의 경우 연구발표, 연구목록 심사를 타 산하 기관처럼 점수화하지 않은 이유는?
- A** <복지여성보건국장> 면접위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했으나 절차 개선하겠다.
- Q** 향후 산업진흥원은 조직 확충 예정이라 전문인력 채용은 현재 인사위원을 통한 면접만으로 부족해 보인다.
- A** <스마트산업혁신국장> 의원님 의견대로 정규직 필기 시험과 NCS 직무능력기반 공공기관 통합채용을 검토 하고 있다. 새로운 사업에는 전문인력을 뽑기 위한 면접 요원도 투입하도록 준비하겠다.
- Q** 타 기관인 시설공단, 레포츠파크, 문화재단의 채용 방식은 복지재단의 현 방식보다 더 객관성을 가진 것 으로 보인다. 2019년 행안부 권고인 NCS 기반 직무 능력기준 기관통합채용 권고안을 창원시가 아직 하지 않는 이유는?
- A** <시장> 최대한 공정성을 담보한 시스템이 갖춰지도록 장단점을 보완해 추진하겠다.

수의계약 관련 개선점 진행상황

- Q** 지난 시정질문, 5분 발언에서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을 위한 수의계약 총량제나 공개경쟁시스템 도입을 요청 했다. 관련 진행 상황은?
- A** <시장> 타 지자체 사례를 검토해 우리시에 가장 적합한 수의계약 총량제를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수의 계약 총량제는 특정업체에 계약금액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이므로 총량제 정착을 위해 노력 하겠다.



박 선 애 의 원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장애인 지원주택의 필요성에 대한 건

Q 지역사회 진정한 통합과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에 대해 좀더 적극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A <시장> 우리시는 장애인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관점과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화를 통해 장애인들의 자립지원 기반여건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창원시에 아직도 '장애인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가 없다.

A <시장> 해당 조례는 지난 4월 박선애 의원님께서 발의 해 심의 중 보류되었다. 또한 조례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나 세부 조문 내용은 다각적 검토 후 논의를 거쳐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Q 시장님께서 민선7기 취임공약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여건을 조성하겠다고 한 바 있다. 그런 맥락에서 시장님께서 장애인들에게 지원주택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A <시장> 장애인에게 시설이 아닌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보건복지부의 탈시설정책에 맞춰 우리시도 창원복지재단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창원문화복합타운 개관 촉구 건

Q 문화복합타운 개관이 미뤄지고 있다. 운영위원회에서 세부시설계획(MD)이 거의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 시행사가 이에 따른 시설 설치를 빨리 해주어야 개관이 될텐데 이와 관련 시행사와 논의가 이뤄졌는지?

A <시장> 실시협약에 따라 시행사는 창원문화복합타운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할 책임이 있다. 운영위원회에서 최선의 MD안이 결정되면 시행사는 운영법인이 운영 가능한 상태로 시공을 완료해야 하고, SM에서도 콘텐츠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시설이 완비될 수 있다.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위원회를 통해 조율을 진행해 가고 있다.

Q 10월에 개관을 한다고 하는데 이 MD안도 아직 완전한 합의가 안 되어 있고 또 시행사가 수용하지 않으면 시설을 하는 기간도 걸리는데 10월 개관이 가능한지?

A <시장> 개관 일정에 대하여 운영법인은 1차로 일부 시설에 한해 10월중에 시범운영을 하고, 내년 상반기에 정상 개관 일정을 운영위원회에 제안한 바가 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시설과 콘텐츠 등 준비사항을 점검하여 최종 개관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며, 우리시도 조속한 개관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양신도시조성사업 공모관련 민원분쟁의 건

Q 시장님은 당선 직후 해양신도시에 가장 먼저 방문해 '시민의 뜻'을 모아 창원의 랜드마크로 조성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생각은 변함이 없는지?

A <시장> 창원시는 마산해양신도시 공간의 가치를 최대한 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Q 해양신도시 민간사업자 공모와 관련해 마산상인연합회는 5차 공모가 개발사업자의 이익만 높인다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상인연합회측은 모든 계획의 무효화를 주장하고 있다.

A <시장> 정당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에 근거없는 과한 주장이라 생각한다. 상인회의 이해를 위해 노력하겠다.

Q 마산해양신도시 조성사업관련 원도심 상인들의 민원과 함께 민간사업자 선정 공모와 관련하여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은?

A <시장> 모든 것은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점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겠다.



「공공 법률 서비스 플랫폼 설립 및 공급 촉구」 결의문

법률 서비스 플랫폼인 로톡(lawtalk)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로앤컴퍼니(로톡)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현재 스타트업 업체가 안정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변협과 로톡 간 벌어지는 법률 서비스 플랫폼 갈등은 정부의 일률적이지 못한 행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단면으로 이와 같은 일은 현재 사회 각계각층에서 벌어지고 있다.

국가는 국민들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바탕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할 의무를 가진 주체로서, 사회전반에 내재되어 있는 갈등의 불씨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들의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단적인 예로, 로톡이 공공의 이익 보장이라는 법률 시장의 공간을 흔드는 위법한 서비스라고 주장하는 변협과 기업활동의 일부이고 신기술임을 강조하며 사익 보장을 주장하는 로톡의 공방은 국민들이 누려야 할 보편적인 법률 서비스의 접근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번 갈등을 계기로 정부는 법률 서비스 플랫폼의 정의와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 범위 등을 정하고 ‘공공 법률 서비스 플랫폼’을 설립하고 공급해야 한다.

변협은 가칭 ‘공공정보시스템’으로 순수 비영리사업을 통해 로톡을 대체하는 법률 서비스 플랫폼 제공을 주장하지만, 스타트업 업체의 사업권을 강제하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민간 사업의 영역이라면 스타트업 업체의 사업권이 보장받아야 하지만 법률 서비스라는 측면에서 공공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법무부 등 정부도 법률 서비스와 관련해 민간에 방치해 현재의 갈등을 야기한 데 대해 책임져야 한다.

그동안 한국의 법률시장은 만인이 아닌 만 명 에게만 평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가 공공 법률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시민들의 법률시장 접근을 용이하게 해야 하며 비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

변협은 변호사들의 단체이기 이전에 이익집단이다. 이익집단이 공공성을 내세우며 또 다른 서비스 플랫폼을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정부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결과 민간(변협과 스타트업 업체) 사이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법 여부 판단을 위해 검토에 착수했지만 결국 변협 또는 로톡의 손을 들어주며, 공공성이 강조되어야 하는 법률 서비스 시장을 민간에게 위임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밖에 없다.

정부가 직접 공공 법률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하여 민간 측과 경쟁하는 구조를 만든 후, 국민들이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는 보편적인 법률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여 최종 선택권을 국민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이에 창원시의회의 의원 전원은 국회, 법무부 등 관계기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법무부는 ‘공공 법률 서비스 플랫폼’ 설립을 위한 논의 및 예산 마련 등을 하라!

둘째, 법제처는 즉각 민간이 공급하는 법률 서비스 플랫폼이 변호사법 등 관계 법령에 충돌하는지 검토하고 발표하라!

셋째, 국회와 법무부, 법제처는 합심하여 만인에게 보편적으로 공급되고 평등한 법률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계 법령 제·개정 및 위법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을 수립하라!

2021년 9월

창원시의회의 의원 일동



「공공의료 강화 및 보건의료인력 확충 촉구」 건의문

코로나19가 발병한 지 1년 8개월의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일상의 회복은 요원한 실정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방역의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보건의료 종사자들은 한여름 무더위 속에서도 밀폐된 방호복과 장갑을 끼고 온몸이 땀에 젖은 채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k-방역의 성공은 온전히 일선 현장에서 일하는 보건의료 종사자들의 희생과 헌신에 기초하고 있음을 한시도 잊지 않을 것이며 고개 숙여 그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전국의 병원에서 간호사와 직원으로 일하는 노동자들로 구성된 보건의료노조가 공공의료 강화와 보건의료 인력 확충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하였지만 4차 대유행이 이어지는 엄중한 상황을 인식하여 지난 9월 2일 극적인 합의를 도출하면서 파업이 철회되었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인프라의 10%도 안 되는 공공 병원이 80%가 넘는 코로나19 환자를 담당하고 있지만 공공병원 확충 정책과 취약한 시설·장비·인력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공공의료 강화대책은 제자리 걸음이다”면서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의료인력의 소진·탈진·이탈이 속출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인력확충과 처우개선 대책은 오리무중이고 끝을 알 수 없는 희생과 헌신만 강요되고 있다”며 코로나 의료 현장의 현실을 시급히 개선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노동계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보건의료노동자의 78.2%가 “자신의 일상생활이 나빠졌다”고 응답했으며, 69.6%가 “육체적으로 지쳐 있다”고 응답해 직무로 인한 극도의 피로가 누적되고 있음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언제 끝날지 예상할 수 없는 코로나19의 재난상황을 보건의료종사자들의 희생과 헌신만으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사실을 엄중히 직시해야 할 것이며 부족한 의료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대책을 적극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병원과 병상 등 공공의료인프라가 부족해 급증하는 확진자들을 제때 치료하지 못하는 상황을 가장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은 k-방역의 우수성이 입증됐다고 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큰 재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보건의료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이 요청하고 있는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국립의과대학 설립, 공공병원 신증축 등 공공의료시설 확충을 통해 코로나 19의 장기화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처럼 유행이 발생할 때마다 군·경, 공무원을 임시방편으로 동원하거나 임시직으로 활용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고 오래 지속할 수도 없다”며 “보건소 간호인력 등 공공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등의 근본적인 대책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창원시의회는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책무를 다시금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공공의료 확충 및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과 예산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부족한 보건의료인력을 시급히 확충하고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에 대한 수당 지급과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보건의료노조와의 합의를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9월

창원시의회 의원 일동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 법제화 촉구」 건의문

정부는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움을 고려해 달라는 농축수산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명절 기간 2회에 걸쳐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한시적으로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였다.

2020년 추석을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농축수산물 선물 한도를 상향 조정한 결과, 매출이 지난해 추석 기간 보다 7% 늘었고, 금년 설 기간에도 농축수산물 선물 매출액이 전년 대비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선물가액 상향 시 별도의 사회적 비용 없이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소비 증진 효과를 누릴 수 있어 농어가 경영 안정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이 정례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 농어업인들은 추석을 앞두고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으며, 예측이 불가능하니 생산이나 판매계획을 미리 세울 수도 없다. 더 큰 문제는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업 종사자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 농축수산물의 생산·유통·판매도 현저히 감소하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을 민간영역으로 확대하는 ‘청렴 선물권고안’을 이번 추석부터 시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위축된 농축수산물 소비가 아예 주저앉을 수 있다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동안 농축수산업계는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하여 매년 명절 기간에 한해 서민이라도 선물 가액을 상향(10만원→20만원)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는 철저히 무시하고 민간영역의 선물가액까지 규정하려는 권익위의 일방적인 태도에 우리 농축수산업자들은 추석 대목에 농축수산물 소비가 위축되지 않을지 망연자실(茫然自失) 하고 있다.

농어촌의 현장은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침체, 봄철 이상저온, 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농업 생산성이 매우 낮아진데다 ‘청렴 선물권고안’까지 시행될 경우 이중삼중고를 겪게 될 수 밖에 없다.

청렴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정부 의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경제적·사회적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는 정책에 공감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생명 산업인 농어촌이 살아야 지역경제도 살 것이며, 농어민이 행복해야 국민도 행복할 것이다. 지속 가능한 농어촌을 지켜 내기 위해서라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현실이며,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을 명절 기간만이라도 상향해야 한다. 또한, ‘예측 가능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농어업인과 유통업계가 상품을 생산하고 출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법제화해야 할 것이다.

지난해 홍수와 폭우로 흉합, 미더덕류의 양식장 어패류에서 피해가 컸고 정부는 현실적으로 피해를 보상해줄 방법도 없는 만큼 별도의 사회적 비용 없이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소비를 증진 시켜 우리 농어업인이 안심하고 농어업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매년 명절 선물가액 상향을 정례화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개정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명절 기간만이라도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을 10만원→20만원으로 상향하고 정례화하는 청탁금지법을 반드시 개정하라.

하나. 정부는 민간영역에 대한 ‘청렴선물권고안’제도 도입을 철회하라.

2021년 9월

창원시의회 의원 일동



특례시 및 특례시의회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방자치법」 관계법령 개정 촉구 건의문**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인구 100만명 이상대도시인 경기도 수원·고양·용인과 경상남도 창원 등 4개 도시는 내년부터 ‘특례시’로서 새롭게 거듭나게 되었으며, 지방의회는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채용’ 등을 통해 역량강화로 집행기관을 효율적으로 견제·감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까지 4개월여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와 관련된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법령 제·개정 등에 대한 중앙정부의 의견수렴이나 초안 공개가 미흡하고 지지부진한 상태로 있어,

당사자인 특례시 및 특례시의회의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채 관계법령 등이 졸속으로 입안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가중되고 있으며,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내년 1월 지방자치법 시행 준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번 8월 27일 입법예고된 지방자치법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은 특례시의 인구 인정기준 및 개별법률에 규정되어 있던 특례사무만을 한데 모아 예시로서 열거했을 뿐, 특례시만의 차별화된 사무권한이 추가적으로 담겨있지 않아 특례시에 필요한 배려의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특례시라는 명칭만 부여받은 채 특례는 거의 없는 허울뿐인 특례시와 특례시의회의가 출범되지 않을까 하는 위기감이 창원·수원·고양·용인 4개 특례시 지역사회 내에서 점점 고조되고 있다.

동안 획일적인 지방자치제도 테두리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권한과 의무 사이의 크나큰 괴리로 수많은 불이익과 불편, 역차별 등을 겪어왔던 450만 특례 시민들의 부른 기대감을 꺾고 더 깊은 실망감을 주게 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바이다.

이미 특례시는 재정규모, 행정수요, 생활물가 등에서 일부 광역도시와 유사하거나 오히려 더 높은 수준이고 광역사무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행정역량을 갖추고 있어, 4개 특례시 및 특례시의회가 끊임없이 내고 있는 ‘광역수준의 특례 반영’ 목소리는 매우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요구라고 할 수 있다.

지방소멸이라는 백책간두의 시대적 위기상황 앞에 특례시가 지역거점도시로서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자치재정·자치행정·자치입법 등에 있어서도 성공적이고 선도적인 자치분권 모델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적극 관심을 가지고 관계법령 내 특례 반영에 나서야 한다.

이에, 창원시의회의는 내년 1월 13일 특례시가 규모와 권한의 일치로 특례시민의 상대적 역차별을 해소하고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의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지방자치법」 관계법령 등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법」 관계법령 제·개정 일정 등을 즉각 공유하고 광역단체를 경유한 의견수렴이 아닌 특례시 및 특례시의회의와 직접 소통하라.

하나, 광역급 특례권한의 포괄적 이양 법제화를 위해 지방분권법을 개정하고, 특례시 이양사무를 추가적으로 대폭 반영한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하라.

하나, 광역수준의 의정수요에 대응하고 복잡다양한 집행기구의 사무와 예산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특례시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급을 광역의회와 동일하게 적용하라.

하나, 일부 광역도시와 인구, 재정상황 등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특례시의회의 의원들에 대한 처우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라.

2021년 9월
창원시의회의 의원 일동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주변 마을 갈따구 피해 해결 촉구」 건의문

지난달 8월 중순 이후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주변 마을에 갈따구 떼가 다시 마을을 습격하여 많은 물적, 정신적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갈따구는 지역의 환경오염을 가늠하는 지표생물의 한 종류로서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 6ppm 이상 오염된 4급수 이하의 오염된 습지에서 서식하는 생물이다. 주로 이른 봄부터 발생하여 황혼 녘에 거대한 무리를 지어 이동하며 불빛만 보면 떼를 지어 모여드는 특성이 있다. 사람에게 모기와 같이 전염병을 옮기지는 않지만 알레르기성 질환을 발생시키고, 야간 불빛이 보이는 곳에서는 끝없이 모여들어 야간작업이나 야간 여가생활을 불가능하게 한다.

웅동지구 복합레저관광단지 주변은 9개의 마을과 골프장, 캠핑장, 야영지가 집중되어 있고, 어선들이 갈치 성수기를 맞이하여 야간 조업을 많이 하는 해안이 있다.

갈따구가 심한 저녁에는 갈따구 피해 때문에 인근 수도마을에서 불을 켤 수 없고, 어민들은 야간 조업을 중단해야 할 정도로 심각하다. 당연히 주변 상가에는 관광객이 오지 않아서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로 고전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더 큰 손실을 입히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2003년 부산신항만 준설 이후 반복되고 있는 현상으로 2007년에는 중앙환경분쟁조정 위원회에서 1,357명에게 17억 6369만원을 배상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손해배상 판결 이후에도 2011년, 2013년 등 거의 매년 갈따구 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주민들과 소상공인, 관광객은 근본적인 해결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해양수산부는 90여억 원 이상의 예산을 쏟아부어 해충억제제를 살포했고, “조속한 시일 내에 습지대 633만 m²의 습지에 복토 작업을 통해 해충의 근원지를 제거하겠다”라고 약속했지만 지금도 매년 갈따구와 해충이 득실대고 있고, 약속했던 복토 작업은 시작조차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방역전담업체가 “이번 갈따구 발원지는 현재 진행 중인 준설토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변명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는 주민과 어민을 격양케 하는 언행이 아닐 수 없다.

동북아 물류의 핵심 거점인 부산신항만 준설 작업은 앞으로 15년 이상 계속되어야 하므로 이제부터는 근본적인 해결 대책을 마련하여 항만을 조성해야 한다.

이에 창원시의회와 주민들은 갈따구 문제의 근본 해결대책을 해당 부서에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하나. 조속히 매립지역의 습지대 복토 작업을 추진하고, 복토 전까지 충분한 배수로를 확보하고 잡초를 제거하라.

하나. 갈따구 예방대책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과 소통하고, 피해 주민에 대한 대책 및 갈따구 번식기 방역대책을 강구하라.

하나. 부산신항만 준설 작업 시 시기적절한 방역대책을 강구하라.

2021년 9월

창원시의회 의원 일동



창원시민의 상수원과 건강을 위협하는 칠서정수장 인근 폐기물처분시설 설치 반대 결의문

창원 칠서정수장은 낙동강 물을 취수하여 창원시와 함안군 칠서·칠북·칠원 일부 지역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매우 중요한 시설이며, 낙동강 물은 창원시민과 함안군민의 식수원으로서 시·군민의 건강과 직결되므로 철저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하다.

NC함안(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함안군 칠서면 공단안길 66-95 일원의 폐기물처분시설 사업예정지는 칠서정수장에서 5km, 낙동강 취수지점에서 2.3km 지점에 위치하여 매립시설과 고온 소각시설을 합쳐 83,920㎡ 사업규모의 전국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주변 환경 피해는 예견되는 현실이며 창원시민의 생명수까지 피해가 우려된다.

NC함안(주)에서 침출수 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하나 기준치 이하의 침출수 처리수가 수질오염과 인체에 영향이 전혀 없다는 의미가 아니며, 지속적인 방류 시 낙동강 취수원 수질오염이 가중되어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침출수 유출 등 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치명적인 수질오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로 인한 피해는 칠서정수장을 통해 상수도를 공급받는 창원시민들이 고스란히 받게 될 것이 명확하며, 하류에 위치한 창원시 북면과 대산면 일원 농경지 역시 수질오염으로 인해 우수한 농산물 생산 차질과 농산물 가격하락 등의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또한 고온소각시설에서 나오는 미세먼지와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등 각종 대기오염물질이 장기적으로 배출된다면 창원시민의 건강과 생활환경 및 창원지역 농산물에 악영향을 주게 될 것이 예상된다. 창원시민은 건강한 생활을 누리고 깨끗한 상수도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고, 환경은 한 번 오염되면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피해를 복구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소각시설과 매립시설로부터 창원시민의 건강권과 생활권, 환경권 등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NC함안(주)는 창원시민의 상수원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폐기물처분시설 설치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해당 사업이 창원시민들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형식적인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말고 허가 후속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창원시는 103만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피해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폐기물처분 시설 설치 반대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라.

2021년 9월
창원시의회 의원 일동

의회운영위원회



제105회

창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폐회중 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조영명)에서는 제106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7. 15.~7. 22.(8일간)로,

제106회

제10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의사 일정을 9. 6.~ 9.15.(10일간) 개최 하기로 했다.



제106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사무국의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제107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을 협의했다.



제10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심사와 창원시 의회 의원연구단체심의위원회(위원장 조영명)에서는 “2021년도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과제 선정 및 의원정책개발비 지원”에 대해 심의했다.



기획행정위원회



제106회

창원시의회(임시회)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백태현)는 ‘창원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4관 1실 1국 3직속 2사업소 1사무소에 대한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받았다.



제107회

임시회 전 소통간담회를 개최해 ‘4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사전 설명을 듣고, 추진상황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107회

임시회 기간 중 ‘진해복합스포츠타설 조성사업’ 등 4건의 수시분 공유 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위원들은 현장방문에서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당부했다.



제107회

임시회 기간 중 ‘창원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된 국민 생활 안전망 확보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021년 2회 추경안’을 원안 가결했다.

· 경제복지여성위원회 ·



제106회

창원시의회(임시회)기간 중 경제복지여성위원회(위원장 문순규)는 소관 부서인 경제일자리국, 스마트혁신산업국, 복지여성보건국 등의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듣고, 조례안 및 동의안 6건을 심사했다.



7월 8일

경제복지여성위원회는 팔용동 창업지원센터를 방문해 창원산업진흥원과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제106회

임시회 기간 중 투자유치단으로부터 SM사업비 검증 결과를 보고 받고, 7월 27일 신성장산업과로부터 국가로봇 테스트 필드 혁신사업 공모계획을 보고받았다.



제107회

임시회 기간 중 2021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예비심사,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10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문화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춘덕)는 “창원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창원시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 도시관리계획(역사공원)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등 조례안 2건, 의견제시의 건 3건에 대한 안건을 심사 하고, 소관부서로부터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제107회

임시회 기간 중, “창원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성호생활문화 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문화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등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의견제시의 건 1건, “2021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안건을 심사했다.

· 건설해양농림위원회 ·



제10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건설해양농림위원회(위원장 이천수)는 소관 부서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창원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6건을 심사했다.



제106회

임시회 기간 중 건설해양농림위원회는 창원형 시내버스 준공영제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문제점 등을 논의했다.



제107회

임시회 기간 중 건설해양농림위원회는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예비 심사했다. 또한 '창원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안'을 수정가결 했다.



제107회

임시회 기간 중 건설해양농림위원회는 △ 대장·소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현장 △ 여성농업인 센터 △ 빗돌배기 마을 등 주요 현안 사업 현장을 방문, 사업 추진 및 운영 현황에 대해 점검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제10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정순욱 의원을, 부위원장에는 박선애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예결특위는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정길상(의회운영위), 박남용, 정순욱(기획행정위), 김경희 박선애(경제복지여성위), 노창섭, 이해련(문화환경도시위), 전홍표, 주철우(건설해양농림위) 의원 9명을 예결위원으로 선임했다.

정순욱 위원장은 “2021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꼼꼼하게 심사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필요한 곳에 집행되도록 하겠다.” 밝혔다.

김 순 식 의원

교방 · 합포 · 산호동



① '우리동네 안전속도 5030' 전국시행을 맞아 캠페인에 참여한 모습

② 산호공원에서 꽃무릇 식재와 포스톤 설치 작업에 참여했다.

③ 도시발전연구회에 참석해 연구과제를 살폈다.

④ 제106회 임시회 기간 중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의 조례안과 안건을 심사했다.



박성원 의원

완월·자산·오동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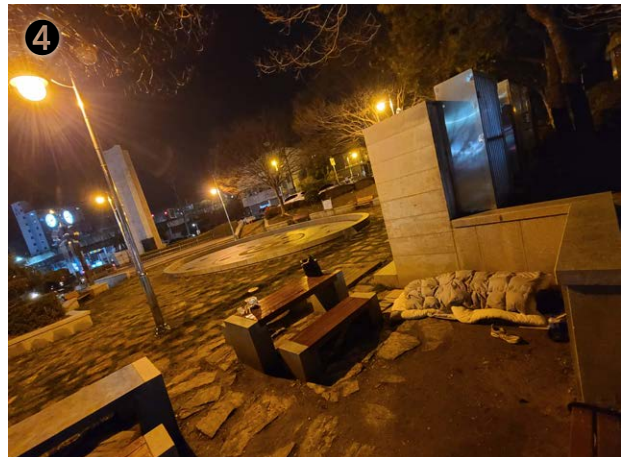


① 제102회 임시회 기간 중 ‘3·15 의거 재정립을 위한 건의문’을 대표발의했다.

② 시정에 대한 질문에서 ‘자산·완월동, 남성동 어시장의 불편한 교통체계 개선’을 요청해, 2021년 5월부터 271번 버스가 개통되어 축하하고 있다.

③ 박성원 의원이 예술인들의 공간 활용을 제안해 시민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된 마산시민극장 전경.

④ 3·15의거 기념탑에서 꽃샘추위 위험에 처한 노숙 노인을 수차례 구조해 합포구 사회복지과로 인계했다.



이 천 수 의원

구산·진동·진북·진전면



① 지개~남산간 연결도로 개통식에 참석해 축하했다.

② 구산면과 진동면에서 빈산소 수괴로 인한 수산물 피해 양식장을 확인하고 있다.

③ 제106회 임시회 기간 중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④ 제106회 임시회 기간 중 '창원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제안설명하는 모습.



전 병 호 의원

완월 · 자산 · 오동동



- ① 제105회 임시회 기간 중 ‘마창대교 유료 통행료 인하에 대하여’ 5분발언 하고 있다.
- ② 제107회 임시회 기간 중 ‘창원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제안설명하고 있다.
- ③ 경상남도 주민자치박람회에서 완월동 주민자치위원들과 작품 전시 및 체험부스를 운영했다.
- ④ 마산어시장 자율방역단과 함께 어시장 전체 방역 활동에 참여했다.



전 홍 표 의 원

현·가포·월영·문화·반월중앙동



① 제102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한 ‘창원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② ‘창원시 아동·청소년 부모 및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 제정 촉구’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③ 제107회 임시회에서 ‘철서정수장 인근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 반대 결의안’을 제안설명하고 있다.

④ 시민들의 안전 편의시설 설치, 제도 개선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경상남도 안전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정길상 의원

현·가포·월영·문화·반월중앙동



- ① 청량산 임도 주변에 주민들의 동의없는 한전의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1인 시위 모습
- ② 제107회 임시회에서 ‘월영동 다 죽이는 고압 송전탑 송전선로, 절대 안 됩니다!’라는 주제로 5분발언했다.
- ③ 제107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안건에 대해 질의하는 모습.
- ④ 신축년 마산만날제(비대면)행사에 참여해 코로나19 종식을 기원했다.



지 상 록 의 원

구산·진동·진북·진전



① 제106회 임시회 기간 중 대표발의한 ‘창원시 청년 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창원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고 있다.

② 제107회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법 관계법령 개정 건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③ 노후된 삼진119 안전센터의 재건축을 축하하며 첫삽을 뜨고 있다.

④ 경남청년봉사대와 함께 진북의용소방대 사무실 보수 봉사활동에 참여한 모습.



최희정 의원

교방 · 합포 · 산호동



① 제103회 임시회에서 ‘창원형 버스준공영제의 선도적 모델 형성 준비와 안심하고 승차하는 승차벨 설치’에 대해 5분 발언했다.

② 어버이날을 맞아 교방동 자생단체와 ‘홀로어르신 건강 떡 나눔’행사에 참여했다.

③ 제103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한 ‘저장강박지원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하고 있다.

④ 산호동 주민들과 시가지 환경 정비에 나선 모습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활발한 연구활동



도시발전연구회(대표의원 김경수)는 9월 15일 “창원시 문화환경 정주여건 개선 및 발전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을 통해 창원시 문화환경 분야에 대한 정주여건을 분석해 우리시 특성을 반영하는 차별화 된 개선방안과 정책방안을 제안했다.



창원시 역사·문화 연구회(대표의원 공창섭)는 9월 16일 하반기 연구활동 논의를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상반기부터 추진 중인 “창원의 성곽유적 조사 및 연구” 용역에서 조사된 성곽 유적의 현황을 보고받고 하반기 추진 예정인 “창원의 성곽유적 현황과 보존활용 방안 학술 대회” 과업 내용을 논의했다.



관광·축제마케팅 연구회(대표의원 권성현)는 9월 10일 “마산국화축제 연계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보고회를 통해 지역 관광자원과 마산국화축제의 연계 활용 방안 등 다양한 마산국화축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기후위기·그린뉴딜 정책연구회(대표의원 전홍표)는 7월 29일 우리시의 연안생태계 시스템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제안을 하고 환경교육도시로서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창원시 “환경자원을 활용한 지속 가능발전교육(ESD) 환경교육방안”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

PHOTO NEWS



7. 1. 창원시민의 날 기념식 참석

이치우 의장은 3·15아트센터에서 열린 제11회 창원 시민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시민대표 400여 명과 함께 축하했다.



7. 6. 남천 배수펌프장 현장 방문

의장단은 연일 이어진 집중호우에 남천 배수펌프장을 방문, 시설물 운영상태와 비상 대응계획 등을 확인했다.



7. 8. 진해구 수해복구현장 방문

이치우 의장과 공창섭 부의장은 진해안골마을 입구 등 수해 현장을 긴급 방문해 피해 실태를 점검하고 복구 대책을 논의했다.



7. 14. 특례시의회 보건복지부 1인시위

이치우 의장은 4개 특례시의회와 함께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했다.

PHOTO NEWS



7. 15. 제106회 임시회 개회

창원시의회는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임시회를 열어 각 위원회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확인하고, 의원 발의 조례안 9건을 비롯해 총 2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7. 23. 여성 생활공감 아이디어 공모대전 시상식 참석

이치우 의장은 여성 생활공감 아이디어 공모대전 시상식에 참석해 입상을 축하하고,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를 응원했다.



7. 27. 특례시의회 공동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창원, 수원, 고양, 용인시가 공동으로 추진한 '특례시의회 조직모형 및 권한 발굴' 연구용역이 최종보고회를 끝으로 4개월 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7. 28.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 촉구 릴레이 시위

창원시의원은 보건복지부 앞에서 지난 14일에 이어 '기본 재산액 고시 개정'을 강력 촉구하며 릴레이 시위를 이어 갔다.

PHOTO NEWS



7. 30. 지개~남산간 연결도로 개통식 참석

창원시의회 의원들이 지개~남산간 연결도로 개통식에 참석해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축하하고 있다.



8. 6. 의장단간담회 개최

의장단은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포함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창원형 시내버스 준공영제 준비사항을 점검했다.



8. 31. 2021년도 주민참여예산 온라인총회 참석

이치우 의장은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을 위한 '2021년 주민참여예산 총회'에 참석해 축하하고 있다.



8. 31. 코로나19 선별진료소 격려물품 전달

창원시의회는 창원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격려물품을 전달하며 방역 최일선에 있는 의료진에 감사를 전했다.

PHOTO NEWS



9. 1.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출범식 참석

성산구 성주동 공영차고지에서 열린 창원형 시내버스 준공영제 출범식에 참석해 시행을 축하하고 있다.



9. 2. 굿네이버스 꿈 응원 메시지 전달식

이치우 의장은 굿네이버스 경남서부지부가 추진하는 '100인의 꿈 지원단'에 참여해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꿈 응원 메시지를 전달했다.



9. 2. 의창소방서 청사 기공식 참석

이치우 의장은 의창구 중동 공공용지에서 열린 의창소방서 기공식에 참석해 축하했다.



9. 6. 제107회 임시회 개회

창원시의회는 9월 6일부터 15일까지 임시회를 열고, 「2021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2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PHOTO NEWS



9. 6. 창원특례시민과 특례시의회에 필요한 알맹이 있는 권익을 요구합니다!

창원시의회 전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내년 1월 13일 시행하는 창원특례시와 특례시의회의 실질적인 권한 및 지역 역차별 해소를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9. 8. 추석맞이 복지시설 방문

창원시의회는 명절을 맞아 장애인 거주시설 등에 위문품을 전달했다.



9. 15. 폐기물처분시설 설치 반대 결의대회

제107회 임시회를 마친 창원시의회의원들은 ‘철서정수장 인근 폐기물처분시설 설치 반대’ 결의대회를 가졌다.

PHOTO NEWS



9. 24. 특례시의회의장단 1인시위

이치우 의장과 조영명 의회운영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청사 앞에서 특례시민과 특례시의회에 걸맞은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했다.



9. 29. 3·15 의거 희생자 위령제 참석

공창섭 부의장은 국립3·15민주묘지에서 거행된 3·15 의거 희생자 위령제에 참석해 추모사를 했다.



9. 29. 이이효재길 개장 기념식 참석

이치우 의장은 진해구 제황산공원 진해광장에서 열린 이이효재길 개장 기념식에 참석해 축하했다.



9. 30. 진해동부맑은물재생센터 증설사업 준공식 축하

진해동부맑은물 재생센터 증설사업 준공식에 참석해 축하하는 이치우 의장.

2021. 7. 13. 언론사 기고

민선7기 출범 이후 창원소방의 변화



김상찬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사람중심 새로운 창원을 목표로 창원시가 오로지 시민만을 위해 달려온 지 3년이 지났다.

그동안 창원시는 특례시 실현과 창원국가산단의 스마트화, 재료연구소 연구원 승격 등 창원시 도약을 위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고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마산지역 축구장 추가 조성, 안전복합체험관 건립 추진 등 시민체감형 주요사업 추진을 위해 열심히 달리고 있다.

이러한 창원시 변화에 발맞추어 민선 7기 출범 이후 소방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우선, 소방인력이 과거와 비교해 많이 충원되었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소방인력이 167명 증원되었지만 민선7기 출범 이후인 2018년부터 2020년까지 296명의 소방인력이 늘어났다.

2015년부터 3년씩 비교를 하면 2배가 넘는 소방인력이 민선7기 이후에 충원이 되었고, 2021년에는 소방인력이 112명 더 충원되었다. 이러한 인력 충원으로 창원본부는 지난 2014년 1인당 담당 인구수가 1704명이었으나 2020년 8월에는 1078명으로 줄어들어 화재진압·구조·구급 등에 질 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소방서와 119안전센터의 신설이다. 2021년 5월에 구산 119안전센터가 신설되어 새출발을 시작했고, 2022년 의창소방서와 진전 119안전센터가 완공되어 소방차량이 잘 미치지 못하는 원거리 지역 골든타임 확보와 소외지역에 대한 소방서비스 실현에 한발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데 필요한 소방장비가 많이 확충되었다.

이러한 많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창원소방본부가 정식 출범 10년이 지난 지금 독립 본부로 인정받지 못하는 기형적 구조로 운영되면서 예산증액 등 실질적인 혜택은 받지 못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정식본부로 인정되는 타 시도에 비해 소방인력 확충과 예산에서는 아직 부족하지만 민선 7기 이후 소방인프라 확충은 이전에 비하면 장족의 발전을 한 셈이다.

‘일을 공경하여 믿음 있게 한다’는 경사이신(敬事而信)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지금의 소방이, 재난의 현장에서 ‘경사이신’의 정신으로 시민의 곁에 항상 함께 하고 있다는 데에는 그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소방은 오로지 시민들의 안전만을 생각하면서 달려왔기에 시민과 소방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 버렸다. 2020년 국가직 전환이라는 큰 성과는 거두었지만 아직 창원소방본부의 구조 정상화는 풀지 못한 숙제처럼 계속 남아있다. 내년은 전국 최초 통합시로 출범했던 창원시가 특례시로 정식 출범을 시작한다. 창원소방본부에서도 특례시 출범에 발맞추어 정식 소방본부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본다.



미국 대통령의 땡큐, 땡큐, 땡큐가 부럽다



구점득 의원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지난 5월 한·미정상 회담 기자회견장에서 한국기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삼성·현대·SK·LG 등 대기업 총수들을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땡큐, 땡큐, 땡큐를 연발했다. 우리 기업들이 44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의 투자를 미국 땅에 하기 때문이었다.

기업의 힘이 국가 외교와 안보 그리고 위상을 높이는 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이었다.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해외시장 확보를 위해 필요한 투자이기는 하지만 국내의 어려운 상황과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44조원의 투자와 일자리가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듯하여 아쉬움도 많았다. 우리는 우리 기업이 해외로 나가기 전에 국내에 더 투자하고 일자리를 더 만들게 하려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를 깊이 고민해야 할 시점이기도 하다. 한·미정상 회담 이후 대통령은 출범 4년 만에 처음으로 기업 총수들을 청와대로 초청하여 오찬 간담회를 가지기도 했다. 정부와 기업의 거리가 얼마나 멀리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기업의 생태를 이해하지 못한 정부의 급격한 정책 전환은 오랜 기간 축적해온 기술력과 노력들을 물거품으로 만들게 되고, 기업들은 불확실성으로 투자를 꺼리게 된다. 이런 여파로 일거리가 줄어든 중소기업은 감원과 도산 위기에 봉착하게 되고 근로자들은 실직으로 내몰리면서 온 몸으로 고통을 떠안게 되기도 한다. 이처럼 정부 정책의 급격한 전환으로 가장 큰 피해와 고통을 당하는 곳이 우리 경남의 도민과 창원 시민이다. 경남과 창원의 경제를 떠받쳐온 대기업 중의 한 곳이 두산중공업이다. 두산중공업은 지난 4년간 근로자를 감축하고 영업이익도 1조 원 정도가 증발해 버렸다. 흑자

기업이 적자기업으로 바뀐 것이다. 여기에 300여 개가 훨씬 넘는 협력사들의 처지는 말하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급격한 정부 정책이 빚어낸 결과이기도 하다. 합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던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여전히 건설되지 않고 있다.

2017년 6월 대통령은 국내 첫 원전 ‘고리 1호기’가 영구 정지되던 날 기장군을 찾아 원전이 안전하지도, 저렴하지도, 친환경적이지도 않다고 했다. 그런데 2018년 3월 우리나라가 수출한 UAE 바라카원전 완공식에 참석하여서는 “가장 안전한 원전은 한국 원전이다. 바라카 원전은 신의 축복”이라고 했다. 세계인들에게 당당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품질과 기술력을 갖춘 원전이라면 우리 국민에게도 진실되게 말해 주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60~70년대에 기업이 정신이 가장 활발하여 오늘날의 현대와 삼성, SK그룹의 모태가 태동한 시기이기도 하다. 이들 기업과 함께 우리는 60년을 성장, 발전해 왔다. 그런데 지금의 대한민국은 국가적 위기에 빠진 느낌이다. 성장동력을 잃어가는 경제로 젊은 세대의 미래에 대한 불안과 좌절이 온 사회를 뒤덮고 있는 느낌이다. 미국 대통령이 우리 기업인들에게 감사의 땡큐를 연발했듯이 우리 정부와 정치인들도 기업인들이 미래에 대한 확신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하여 투자를 늘리고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여 가슴 뛰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도록 기업인에게 진정한 땡큐를 보내 주어야 한다. 잘못된 정책은 빠르게 바로잡고 경남과 창원의 경제를 살려 놓아야 한다.

2021. 7. 19. 언론사 기고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창원특레시가 답이다



김종대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진도아리랑’을 듣다 보면 가사 중에 문경새재가 나온다. 남도의 끝 바닷가 노랫말에 웬 문경새재일까? 그 문경에는 험준한 고갯길 외에도 색다른 전설 하나가 전해온다. 문경새재는 좌우로 조령산과 주흘산이 우뚝 솟아있는데, 주흘산은 문경의 주산이다.

전설에 따르면 조선이 개국하자 전국의 산들이 서울의 진산이 되고자 수도로 몰려들었다고 한다. 주흘산도 부지런히 행장을 차려 길을 나섰으나 문경에 다다랐을 때 이미 삼각산이 서울의 진산으로 낙점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크게 탄식한 주흘산은 문경에 눌러앉았다. 모든 산들이 서울 쪽을 보고 있지만, 주흘산만은 삼각산에 등을 돌려 남쪽을 바라보게 되었다.

전설이 만들어낸 재미있는 이야깃거리일 뿐이다. 그러나 과거 봉건왕조시대에는 산마저도 서울로 몰릴 만큼 수도권이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중심이었음을 방증하는 에피소드 아니겠는가.

그래서 서울을 옮기는 천도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했다. 고려시대에도 개경에서 평양 천도를 두고 갈등을 빚다 일어난 사건이 묘청의 난이었다. 서울을 옮기는 것은 나라를 새로 만드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왕이 새로운 터를 찾아 움직이면 사람뿐 아니라 군사, 물자, 심지어 산과 강까지도 따라 움직일 판이다.

슬픈 일이지만, 나라의 주인이 임금인 시대에는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 시대인가. 나라의 주인은 왕이 아니라 국민이다. 우리 헌법도 국가의 주체는 국민임을 천명하고 있다.

최근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이슈가 뜨겁다. 이견희 컬렉션이 등장하면서 그 열기는 더 달아올랐다. 이견희 컬렉션 기증관 위치가 결정되기도 전에 황희 장관의

‘수도권 유치’ 시사 발언이 전해지면서 전국이 들끓기도 했다. “지역민은 국민도 아니냐”, “서울공화국이나”, “지방분권 약속은 말뿐이었느냐” 등 불평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결국 이견희 컬렉션 기증관 위치는 서울 용산과 송현동으로 압축해 발표되었다. 아쉬운 대목이다. 우리 창원은 고 이병철 삼성 창업주가 최초로 사업을 시작한 곳이다.

북마산 화산다리 옆에 세웠던 협동상회(정미소)가 바로 그것이다. 그런 연유로 우리는 이견희 컬렉션이 창원으로 오길 간절히 바랐다.

국립현대미술관 분관과 관련한 보도에 따르면 문체부도 ‘창원시가 가장 준비가 앞선다’, ‘입지와 접근성에서도 유리하다’, ‘유치 노력도 가장 적극적이다’ 등 긍정적 신호가 감지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허성무 시장을 비롯한 시민들의 의지가 모인 결과다.

정부의 오랜 지방분권 정책은 이제 전향적 변화가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의 제1국정철학이 무엇이었든가. 지방분권이였다. 지방분권개헌 소리는 쑥 들어가고 없더라도, 작은 실천 하나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한국인의 마음의 고향인 '가고파' 마산만에 난데없는 섬이 만들어졌는데, 그 계곡 같은 섬에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 같은 '국립현대미술관 분관'이 유치된다면 그곳이 지방 예술문화에 대표적 상징물(랜드마크)이 되고,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그 첫걸음의 최고 적지가 창원특레시임은 이미 문체부도 잘 알고 있다 하니 그에 대해서는 부연하지 않겠다.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3·15 축시



박성원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잔잔한 호수 합포만 바다가 좋고
술맛이 좋아 인심도 좋은 마산이여!
나는 이 고장 마산에서 태어나
시민임을 마음으로 자랑한다.
3·15의거와 부마민주항쟁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두 번이나 바로 세운
민주화의 원년을 창출한 마산
1950년 한국전쟁에서 김성은 해병부대는
최후의 보루인 진동리에서 북한군을 퇴각시켜
위기에서 구한 마산을 지켜낸 승리의 깃발

1960년 3월 15일
그날을 생각하면 오늘도 가슴만 아프다.
불종거리 창동변화가 남성동에서 물벼락 맞고
서성동 부림동 수성동으로 흩어진 데모대
추산동 자산동 중앙동 삼거리 길목에 다시 모여
해안통으로 시청쪽으로 북마산으로
민주화거리 2.4킬로를 향해 가는 길에
어깨동무하고 맨손으로 부정선거 항거하며
독재타도 외치면서 투쟁하던 순간 총부리는
땅바닥에 불빛으로 진동하는 총소리에 맞추어
분노의 불길을 더욱 더 타오르게 하였고
소름끼치는 살상의 전초전 물러설 줄 모르는
심야의 혈전장 슬픔과 괴로움을 안겨 준
그날의 여운은 어둠의 함성으로 부풀어 올라

해마다 3월이 오면 눈 감고 머리 숙여 추모하는 모습
말 없이 민주제단에 자유의 피를 뿌린 13위 영웅들이여
아! 거룩한 이 땅의 수호신들이여!
우리의 가슴을 울먹이며 자꾸만 자꾸만
눈물이 납니다.

마산의 3월은 불타 올라
1960년 4월 11일 갈매기 긴 울음 울고
봄바다 합포만에 눈에는 최루탄을 쫓고 전신은 결박된 채
죽어서 살아 돌아온 소년 김주열
마침내 저 찬란한 역사의 4월로 점화되어
온 세상이 4월 하늘을 갈라낸 그들의 함성을 들어보라
역사를 증언하는 자들이여 그날의 힘을 보라
이곳에서 자유와 정의를 무시하는
반민주 불의 부정에 항쟁의 불길이 솟구치는 날
온 세계를 울렸던 우렁찬 아우성
뜨거운 피의 여운은 4월 19일 혁명의 기폭제가 되었도다.

1960년3월15일 이후 우리 마산 시민들의 자존심을
되살리기 위하여
명예회복과 보상에 대한 입법제정을 수차례 걸쳐
시도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드디어 2021년 6월 29일
아득한 61년 더하여 106일 만에
제21대 국회 여의도 국회 본 회의장에서
3·15 특별법이 여야 모두
화합의 표결 만장일치로 통과되는 순간
우리 마산시민들은 너무나
기뻐서 하늘을 날 것 같았습니다.

2021. 8. 5. 언론사 기고

창원시의회 도시발전연구회, 하동을 담다



박남용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1박 2일의 짧은 여정, 김경수, 김경희, 이찬호, 박남용 등 네 명의 의원은 공무원 동행 없이 토요일 이른 아침부터 일요일 저녁 늦은 시간까지 하동에서 비교견학을 했다. 창원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도시발전연구회에서 주최한 서울시립대학교 정석 교수의 ‘천천히 재생’이란 주제의 강의를 듣고 관심을 표명한 의원을 대상으로 선착순 지원받아 진행했다.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임을 감안해 보다 철저한 방역수칙과 사전준비를 병행했다.

계획을 수립해 유·무선으로 현지 사정을 확인하고 창원과 비교되고 배워서 접목할 대상들을 꼼꼼하게 정리했다. 네 명의 의원 역시 사전지식을 통해 몇 군데 꼭 다녀와야 할 장소와 학습할 내용을 공유했다. 계획서를 작성하고 예산을 수립하고 일정표를 만들고 개인 차량도 점검하며 사전 예약이 필요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 챙겼다. 정해진 시간에 모인 우리는 하동을 향해 출발하며 간단한 소감과 의견을 개진하며 고속도로보다 지방도를 이용했으며 평소에는 무심코 놓치고 지나친 도시와 농촌의 공기와 나무, 공간과 생태계를 한 눈에 보며 서로의 생각과 추억을 회상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하동은 몇 번 다녀왔지만 갈 때마다 볼 것이 많다는 생각에 이구동성으로 동의했다. <미스터 트롯> TOP7 정동원의 고향집을 카페로 운영 중인 ‘우주 총동원’, 아름다운 다도해가 한눈에 펼쳐 보이는 해발 849m 하동 금오산 정상에서의 짜릿한 활강을 즐기는 ‘하동 집와이어’, 사자소학, 명심보감 등을 가르치며 고전을 통해 한문·다도·예절 등 전통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청학서당’, 협동조합 형태 운영과 스타벅스에 납품하는 국내 유일 하동 녹차를 체험하는 ‘관아수제차’, 호남

사람과 영남 사람이 어우러져 장을 펼치는 전통시장으로 화재 이후 회복 중인 ‘화개장터’, 차 향기 그윽한 산책길로 유명하며 하동의 봄을 만끽하는 최고의 길 ‘천년 차밭길’ 등을 씬 없이 둘러봤다.

진해 출신 가수 진해성 등 지역 출신 연예인 관리와 방영 중인 드라마 홍보도 병행하고 창원 해양공원과 집트랙, 창원 팔룡산 돌탑과 봉암수원지를 연계한 관광 기반 구축, 도심 속 폐교를 활용한 교육과 전통을 문화와 관광으로 구상했다. 특히, 북면 수변생태공원의 새로운 관광지 부상으로 적극적인 연구와 지원은 물론, 성주사를 비롯한 사찰, 교회, 성당 등 종교시설을 활용한 차 문화 프로그램 개발, 전통시장 인식 전환을 바탕으로 카트, 신용카드, 주차장 보완 등 소비자 중심의 획기적인 변화와 마산, 창원, 진해 둘레길 142.6km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함을 토론했다.

길을 나서면 보인다. 혼자보다 둘이 낫다. 둘보다 다수일 때 효과적이다. 우리가 길을 나서며 서로에 대한 배려와 양보를 강조하지만 진정한 여행은 혼자 하는 것이라 한다. 그러나 1박 2일의 비교견학 일정이 여행이 되고 추억이 되었고 학습이 돼 그것이 창원에 어떤 형태로든 도움될 것임을 확신한다.

많은 의원에게 삼삼오오 배낭여행을 권장한다. 움츠리지 않고 나서면 우리가 배울 것이 너무나도 많다. 책과 학습을 병행한 이론적 지식을 기반으로 현장에서 만나는 현실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 시민의 생산 동력이 세금이 되고 예산이 돼 우리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무궁무진하다. 시행착오를 줄이고 예산을 적재적소에 사용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며 정확한 비판과 건전한 대안을 제시하는 부단한 노력이 선출직 의원의 몫일 것이다.

송전선로와 갈등



전 홍 표 의원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변화를 원한다면 갈등과 소통은 필수 조건이다. 왜냐하면 갈등의 본질이 바로 변화이기 때문이다. 갈등을 소통으로 풀지 않으면 변화는 불가능하다.

한국전력공사 '154kV 서마산분기 송전선로 증설 사업'은 2010년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승인을 받아 시작됐다. 하지만 한전이 원하는 변화는 갈등을 불러왔다. 상대는 지역주민이었다.

이해관계가 대립하기 때문에 불거진 상황을 두고 갈등을 빚는다고 한다. 갈등은 한자로 침 갈, 등나무 등이다. 침과 등은 모두 조금만 내버려 두면 얹히고 설켜 손을 쓸 수가 없다. 이럴 때 필요한 게 톱 터놓고 이야기를 풀어낼 소통이다.

소통의 물꼬를 튼 건 창원시였다. 지난 18일 시청 회의실에서 시민갈등관리위원회를 열어, 월영주민과 한전 측 갈등을 조정하기로 한 것이다. 갈등 근본 원인을 찾아 톱 터놓고 이야기를 할 장이 마련됐다. 그렇다면 갈등 당사자가 모두 만족하는 결과를 위해 꼭 필요한 소통의 원칙은 무엇일까?

'소통(疏通)'이란 트일 소, 통할 통, 즉 '막힌 강물을 터서 바다로 흐르게 한다'는 뜻에서 나온 말이다. 중국 성군의 대명사인 '요순' 시대에 독을 쌓아 강물을 막는 대신, 강물이 막힘없이 바다로 흘러갈 수 있도록 물길을 터 백성은 홍수를 걱정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에서 유래했다.

하지만 소통의 흐름에는 방향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목적이 정해진 사업이나 정책을 홍보하고, 설득을 통해 이해를 구하는 것이 소통인 줄 알지만, 이는 바닷물이 거꾸로 강으로 침범하는 격이다. 이것은 진짜 소통이 아니다.

전기 없는 삶이 불가능한 시대에 송전탑과 선로 신설

사업은 필수 불가결하지만, 사업 결정에 앞서 살폈어야 할 이해 당사자, 지역주민의 민주적인 승인 절차를 간과했다. 사업 계획단계에서부터 영향권에 있는 지역 주민에게 충분한 정보를 주었어야 했고, 충분한 의사 결정 권한을 주어 참여하도록 해야 했다. 지역주민을 배제한 사업 승인과 사후 통보식 '무늬만' 소통은 지역민, 학부모, 시민들 사이 빼앗긴 민주적 의사 표현과 결정 과정에 배신감을 포함한 갈등으로 커졌다. 바닷물이 강을 침범하듯 소통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소통 물길을 바로 잡자. 그러려면 첫째, 어려운 단어가 난무하는 사업에 대해 지역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이후 다양한 대안을 가지고 검토해야 한다.

둘째, 대안을 검토할 때 경제성과 함께 정책, 제도, 환경, 안전 등을 포함한 각 안이 가지는 사회적 영향과 환경적 영향도 동일한 중요도로 다뤄야 한다. 이때 신설을 전제로 한 검토 역시 배제해야 한다. 계획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사회적·환경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적절히 평가해 반영해야 한다.

셋째, 대안 검토와 선택에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한다. 안정적 전기 공급만큼 지역주민에게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권 보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날 선 이해가 존재하는 갈등에 소통은 속도전이 되어선 안 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본원인을 찾아내어 풀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지점에서부터 실타래는 다시 엉키는 법이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창원시 시민갈등관리위원회가 소통 원칙을 지키며 올바른 방향과 속도로 소통 물꼬를 터주길 간절히 바란다. 서서히 물이 찬 도랑이 강으로 또 바다로 흐르듯이 말이다.

2021. 8. 30. 언론사 기고

창원시와 남창원농협 사태를 지켜보며



박남용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지난 5일 남창원농협유통센터 관련 확진자 16명이 발생했다. 4일 저녁 해당 유통센터 이용자들에게 진단 검사를 당부하는 재난문자를 발송하고 이에 시민 수천 명이 선별검사소로 한꺼번에 몰리면서 도심 곳곳이 혼잡을 이뤘다.

19일 창원시는 남창원농협에 법적, 행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남창원농협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영업한 것에 대한 과태료 부과·운영 중단 처분을 하고 구상금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는 내용이다. 과태료 부과 방침을 남창원농협에 전달하면서 이의 신청 안내 공문을 발송하며 구상금 청구를 위한 일차적인 행정절차에 돌입했다.

남창원농협 측은 강하게 반발, 법정 다툼을 예고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경남본부에서 구상금 청구와 관련, 중재를 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창원시는 시민 피해 보상이 적기에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주변에선 구상금이 10억 원이 넘을 것이라ں 얘기가 나오고 있다. 조합장은 창원시 행정처분과 구상권 청구 근거가 되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최초 확진자가 나온 2일 이후 창원시로부터 영업 중단 등 어떠한 권고나 명령을 받은 바가 없다”며 “최초 확진자는 자신이 마트에 근무한다는 사실을 알렸고 숨긴 사실도 없다. 보건당국이 즉각 대응해 놓고 책임 전가를 한다”고 주장했다. 마트나 백화점 등 대형 매장에서 확진자가 나올 경우 무조건 영업을 중단하라는 것도 방역수칙에는 없다고 덧붙였다. 할인행사도 통상 대형매장에서 해오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일련의 과정을 보면 분명 농협 측 잘못은 적지 않다. 또한 창원시도 자유로울 수는 없다. 코로나 사태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관계 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했다면 더운 날씨에 고생하는 시민은 줄었을 것이다. 또한

의료 인력도 마찬가지다. 추가 인력 없이 자체 인력으로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었으며 그 많은 진단 키트도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며 주말도 반납하고 동원된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등 재정, 행정적인 낭비도 최소화할 수 있었다. 그럼 창원시 대응은 적절했는가 말이다. 최초 확진자가 발견되었을 때 신분이 노출돼 해당 마트에 폐쇄명령은 물론, 밀접접촉자를 비롯한 관계자 검사를 진행했어야 했다. 언론에 나온 내용을 보면 두 번의 권고 후 세 번째 폐쇄했다. 확진자 발견 후 이틀이나 지나서다.

두 기관의 행태를 보면 대단히 안타깝다. 집에 불이 났는데 서로 합심해서 끄고 원인규명과 사후처리 방안 수립, 재발방지대책은 수습이 된 후에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정확한 규정도 애매모호하고 질병관리청, 경상남도 복지보건국, 창원시보건소, 시민안전과, 경제살리기과, 법무담당관, 감사관 등 기관과 부서에서 정확한 유권해석이 필요할 것이다.

아무리 잘못은 했어도 모두 우리 시민이다. 한쪽 방향으로 몰아가는 모습은 좋지 않다. 창원시는 책임이 없는가 말이다. 규정대로 정확하게 폐쇄명령을 내렸다면 그와 같은 사태는 없었을 것이다. 사후약방문 형태 조치는 오히려 화를 자초한다.

남창원농협유통센터는 누리집에 어떤 사과 내용도 없으며 관리 또한 되지 않고 있다. 과연 이번 사태에 대한 반성은 하고 있는 것인가? 시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창원시도 브리핑을 통한 구호만 외치지 말고 재발방지대책과 책임 관계, 손해배상소송, 구상금(권) 청구, 지휘통제 부서 등 관련 자료를 신중하게 검토해 시민이 불편한 이와 같은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창원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앞두고



박남용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창원시는 공공성과 효율성, 대시민 서비스를 크게 개선하는 대중교통 대혁신이라는 사명감으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버스준공영제란 버스 운영 서비스는 민간이 제공하고, 자원과 서비스 관리는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회사 경영과 직원 복지를 개선하고 적자 노선 감차 방지,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지원금 비용 발생과 경영 효율성 저하가 단점으로 대두된다. 2004년 7월 1일 서울시에서 최초로 도입된 제도로, 공공 노선 및 운행관리 강화와 민간의 효율성을 접목한 제도다.

서울에서 처음 시행된 이후 대전, 대구 등 광역시와 제주도가 도입해 시행 중이며, 2007년 7월 16일 옛 마산시에서 시행하다 2010년 12월 31일 폐지됐다. 그러나 지난 2020년 8월 2일, 15년 만의 시내버스 파업으로 창원시가 버스준공영제 등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의지를 보이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다.

준공영제의 기본개념은 창원시가 노선 조정권을 갖고 업체는 버스운행과 노무관리를 수행한다. 수입금은 시와 업체가 공동 관리하며 노선운영 방식도 공동배차제에서 개별노선제로 전환한다.

‘창원형 시내버스 준공영제’ 핵심은 공공성·효율성·서비스, 미래 지향성이다. 운수사업자·종사자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고 준공영제 선행도시에서 발생했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시책들을 창원형 준공영제에 담았다. 또한, 준공영제 협약 갱신주기 5년 설정 등 향후 창원시 시내버스 정책에 대한 장기적 비전도 제시했다.

나는 창원시내버스 준공영제 추진위원으로 평소 시내

버스를 이용한다. 작년에는 시내버스 모니터로도 참여했다.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제시한 다양한 의견들이 준공영제를 앞두고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는 해당 부서와 업체에서 노력하는 점을 생각하면 일일이 설명할 필요는 없다.

다만, 버스정류장에 이중으로 설치된 쉼터형 정류장과 표지판, 정시성을 고려한 버스노선·배차간격, 친절·난폭운전 기사에 대한 상벌제, 끊임없이 설치하는 BIT 시스템, 부서이관으로 책임이 모호한 정류장 관리와 청결상태 등 할 말이 많다.

본인은 창원시내버스 준공영제 추진위원임에도 구체적인 내용은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됐고, 위의 문제점에 대해 부서의 해명도 듣지 못했다.

창원시내버스 관련 위원회도 있고 모니터 활동도 있어, 의견을 수렴해도 개선될 여지는 있다. 하지만 해당 소속의 전문가라고 하는 이들이 버스를 이용하는지 의문이다.

경험을 하지 않고는 내용을 파악할 수 없다. 현장에 답을 외치지만 이를 외면하는 이중적인 모습이다. 코로나로 핑계대고 부서 전출입을 통한 업무 인수인계로 외면하면 그 정책의 부작용과 불편은 오롯이 시민의 몫이 된다.

창원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엄청난 재정이 투입된다. 후발주자인 창원에는 단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지금이라도 재정 부담과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신경써야 할 것이다.

2021. 9. 3. 언론사 기고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더 이상 미뤄선 안된다



전 홍 표 의원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다. 2000년대 초 정부는 날로 심해지는 수도권 인구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해법 중 하나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을 추진했다.

2005년부터 본격 추진된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형평성을 우선하는 공공기관 배치방식으로 수도권 소재 153개의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을 완료했다. 그 결과 수도권 인구집중 속도가 완화되었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가 역전되는 시점을 2011년에서 2019년으로 8년 정도 늦추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러한 수도권 인구집중 속도 완화의 효과에도 수도권 인구의 혁신도시 이동이 2015년 정점 이후 감소 추세로 접어들었으며, 향후 혁신도시의 수도권 인구분산 효과를 추가적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평가도 있었다.

비수도권의 지자체들은 한 명의 인구라도 늘리기 위한 눈물겨운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몰리는 청년들을 잡아두기에는 역부족이다. 창원시도 마찬가지이다. 경남의 수부도시 창원은 한때 기계공업의 메카이자 수출전진기지로서 대한민국 경제를 선도하는 도시였다. 그러나 제조·기계산업의 쇠퇴로 지역 경제가 침체되었고, 이에 기존 산업의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고자 국가산단고도화, 수소산업, 마산로봇랜드를 조성하고, 기업노동자 전입지원금, 청년 월세 지원, 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등 인구 증가를 위한 다양한 유인책을 쓰고 있다. 그러나 한때 109만에 이르던 인구는 오히려 103만명 대로 감소했다. 그중에서도 20~34세까지의 청년 인구는 무려 4만 6000여명이 줄어 감소 인구의

65.8%를 차지한다.

그렇다면 정부는 언제까지 수도권으로 몰리는 청년들을 이대로 두고만 볼 것인가?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성과를 이어가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해소를 꾀하면서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수도권에 아직 많이 남아 있다. 2018년 문재인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과제로 ‘혁신도시 시즌 2’ 추진방안을 발표했지만 정권 수개월을 남겨둔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다.

2003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방침’ 발표 이후 이전공공기관 선정 및 배치, 부지조성, 이전대상 공공기관 노조와의 합의 등 지난한 과정을 거쳐 153개 기관이 최종 이전을 완료하기까지 16년이라는 세월이 걸린 것을 보면 지금 시작해도 늦다. 정책효과가 나타날 즈음에는 ‘수도권공화국’이 고착화되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를지도 모른다. 부디 현 정권의 빠른 판단과 결정을 기대해 본다. 2022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리더의 올바른 문제의식과 해법 제시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이제 내년 1월 13일이면 창원이 특례시로 출범한다. 1차 공공기관 이전 때와 달리 2차 공공기관 이전 시에는 수도권에 전가되고 있는 사회적 비용을 창원특례시가 나눠서 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본다.



마산해양신도시에 글로벌테마파크 조성하자



박춘덕 의원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마산 해양신도시를 세계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창원특례시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야 한다. 창원시는 신도시 조성 원가 3,400여억 원의 터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전 세계를 상대로 사업자를 공모할 것을 제안한다.

해양신도시는 1997년 12월 마산항 광역개발 기본계획 수립, 2013년 1차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고시 후, 2014년 제2차, 2015년 제3차, 2020년 12월 제4차 공모까지 차례로 실패하였고 지금은 제5차 공모 중이다.

창원시가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을 하지 못한 것은 해양신도시 사업비 회수 문제가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5차 공모는 민간사업자 중도금 납부를 1차 20%, 2차 40%에서 1차 10%, 2차 50%로 바꿔 민간사업자 부담을 낮추고 용지매입비 배점을 40점에서 100점으로 높이는 대신 별다른 기준이 없던 용도지역을 상업 용지로 지정한 게 핵심이다.

제5차 공모공고 내용을 접한 마산해양신도시개발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상업지구 개발로 창동 등 마산 원도심 상인들만 피해를 감수해야 된다는 이유로 강력 반발하고 있다.

현재 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공모와 관련해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제5차 공모는 법적인 문제를 처리하고 공고를 해야 마땅하다. 또한, 해양신도시 사업은 각종 의혹이 난무하고 있다.

사업을 서두를 이유가 없고 창원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사업이라고 인식될 때 추진해야 한다. 해양신도시가 왜 지금까지 진행되지 못했는지 냉정한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 그 핵심은 지금껏 투입된 돈을 회수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해양신도시 사업에 대하여 3,400억 원의 시상금이 걸린 공모전을 전 세계를 상대로 펼쳐나가자. 그 자체로 세계 주목을 받는 도시가 될 것이다.

지난날 창원시는 시민 염원을 담아 진해글로벌테마파크 유치를 위하여 경남도와 함께 온 마음으로 유치전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글로벌테마파크는 6성급 호텔, 카지노, 컨벤션, 쇼핑몰, 대형영화관, 수상 레포츠 시설과 골프장 등이다.

추정사업비 3조 5,000억 원, 생산유발효과 9조 5,000억 원, 부가가치 4조 원, 고용유발효과 10만 명이다. 글로벌테마파크 유치 경험을 발판으로 도전하자. 도전하면 성취할 수 있다. 해양신도시를 세계적인 것으로 만들자. 발상의 전환으로 해양신도시를 창원특례시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21. 7. 10. 창원시보 제265호 게재

진해 쓰레기 매립장과 해법



박춘덕 의원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진해구 덕산동 585번지는 진해루 앞 소죽도 찜질방 옆 공유수면이다. 이곳은 진해구민의 생활 시설이 밀집된 곳이다. 하수처리장, 소각장, 재활용 분리수거장, 쓰레기 매립장이 있다.

진해 생활폐기물 매립장 선정은 1991년 황무지였던 이곳에 각종 처리시설을 설치하고 단계별로 매립을 시작해 제1공구는 매립을 완료해 해군골프장으로, 제2공구는 2023년까지 매립을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동안 이 지역은 끊임없는 민원과 피해를 호소하는, 진해지역의 대표적인 소외지였다. 하지만 지난 30년간 도시는 팽창했고 진해루 인근의 경화동, 병암동, 이동, 자은동, 덕산동, 풍호동 지역은 진해루 일대가 창원 제1의 힐링지역으로 변모함에 따라 주거지역과 상업시설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으며 주민의 행복지수 또한 상승하였다.

이러한 시기에 창원시는 덕산동 공유수면에 바닷물을 빼내고 그곳이 1991년에 지정된 쓰레기매립장이므로 제3공구로 지정해서 그대로 쓰레기를 매립한다고 한다.

도시가 팽창하면 행정에서는 도시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제2, 제3의 매립장을 물색하는 등 시민의 삶을 보장해야 한다. 매립장의 사업 종료는 기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수립한 매립량으로 해야 한다. 덕산매립장은 현재 345,539톤으로 약 87% 수준이다.

현재 창원시의 매립장 관리는 부실하기 짝이 없다 불연성 폐기물과 공사 현장의 5톤 미만의 불연성 폐기물

등을 반입해야 함에도, 마대 자루에 생활쓰레기 등 가연성 폐기물이 일부 반입되어 대부분 그대로 매립되고 있다.

가연성 쓰레기는 소각 후 소각재를 매립해야 하나 그렇지 못하는 실정이다. 현재 매립장의 원칙만 준수한다면 매립장의 매립 시한은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창원시는 매립기한 종료에 따른 촉박한 행정절차를 핑계로 기타 지역 확보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지 않는 것은 진해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울 따름이다.

창원시는 제2공구에 매립된 쓰레기 종류를 선별해서 소각할 것은 소각하고 가연성 폐기물 등은 철저히 수거 처리해야 할 것이다. 제3공구는 2024년부터 매립을 시작하기 위해 올해 8월부터 공유수면의 바닷물을 빼내고 매립을 위한 조성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새로운 매립장 주변은 2차선 도로로서 차량 통행과 생활체육인들이 넘치는 곳이다. 창원시가 자랑하는 관광1번지다. 창원시가 이런 중차대한 사업을 시행하면서 충분한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것도 문제다.

사람중심 정책을 표방하는 창원시는 통합 이후 소외된 감정을 추스르는데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전환의 시대, ‘공정과 정의 그리고 사람’



최영희 의원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공정과 정의 그리고 사람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이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최연소 32살 연방거래 위원장, 즉 우리로 말하면 공정거래 위원장이 된 리나 칸입니다. 여야 없는 90%가 넘는 초당적 지지를 받아 당선된 이유는 29세에 쓴 박사 졸업논문 ‘아마존의 반독점 역설’에서 문제와 진단을 정확히 짚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마존식 600조 이상 IT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실제 독점임에도 가격을 내려 소비자 효용이 올라가면 독점이 아니다라는 즉 가격을 올리지 않고 물가상승을 억제하고 소비자 후생만 된다면 독점도 괜찮다라던 기존의 공식을 깨고 국가가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유는 경쟁을 막으려 타 신생기업을 인수하고 노동자 인건비 등을 낮춰 경쟁자와 종사자의 효용을 침해해 독점을 유지한 것이라면 전체에 미치는 이 악영향을 국가가 규제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들이 중소기업을 파괴하고 서민을 실직자로 만드는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어서라는 것입니다.

이 사례는 IT와 산업간 경계가 흐려지는 big blurr 전환기인 요즘 ‘사람’에 투자보다는 디지털, 탄소포집 기술, 수소 등 기술 중심인 정부의 뉴딜 2.0 발표, 기후 위기로 인해 100만종 멸종 예상임에도 말잔치에 불과한 탈탄소 정책들, 기술변화 산업전환기 제조업 표준혁신 공정모델과 실업, 미래차 등 현안을 되돌아보는데 유의미합니다. 산업전환과 더불어 내연기관 종사자 해고, 자회사와 외주화로 인한 부품 생산시 중소기업 협력사 쇠락, 소재산업과 기계·운송서비스 전환이 코앞이고 기본소득 수십만원으로는 실업, 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기에 전환기 큰 축이 ‘사람’임과 종사자도 전환

방향에 참여가 필요합니다. 지역민 고용을 이끌어내지 않는 혜택만 주는 기업지원 수정도 필요하며 일자리 보장 국가책임 의제는 한발 더 나가야 합니다.

화엄경의 ‘일미진중함시방’ 즉 ‘티끌 속에 우주가 들어 있듯 만물이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처럼 기존 모든 정책들은 공익과 상생측면에서 재검해야 합니다. 공익을 담보하지 않는 무분별한 토지 개발 사업, 등록 된 지역민 누구나 먹고 살 수 있게 한번쯤 일감을 받는 게 당연한데도 편중되어 온 관 발주 계약 등은 이제 지역 경제 위기하에서 당연하지 않습니다. 이렇듯 현안들에 리나 칸 식의 ‘사람’과 공익으로의 사고 전환, 모두가 연결되어 있어 그 과보를 같이 받는다는 일미진중함시방의 말씀은 예산 논의와 지금의 위기 극복을 위해 꼭 잊지말아야 할 ‘당연’함이라 생각합니다.



2021. 8. 10. 창원시보 제267호 게재

특레시의 앞날에 대하여...



이헌순 의원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창원시는 103만 창원시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광역시 승격을 추진해 왔으나, 아쉽게도 광역시는 불발되었다. 대신 특레시 지정이라는 쾌거를 이루었다. 특레시 지정과 동시에 시내 곳곳에 내걸린 축하 현수막을 보면서 우리 시민들은 특레시가 되면 많은 혜택이 있을 것이라는 큰 기대를 하고 있다. 과연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앞선다.

32년 만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올 1월 공포되어, 1년 후인 2022년 1월 13일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물론,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법률안 통과 후 7개월이 흐른 지금 어떤 변화도 느낄 수 없다. 큰 그릇은 받았으나 그 그릇에 담을 어떤 것도 아직 받지 못하고 있다. 무엇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 창원시를 비롯한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는 정치인을 비롯해 행정과 의회가 이마를 맞대고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인 만큼 많은 것을 요구하기 보다는 실현 가능한 것부터 관찰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예전에는 인구 100만이면 광역시였는데 이제는 광역시가 아닌 특레시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에 준하는 여러 혜택을 부여받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잘못된 중앙정부의 획일적 기준으로 광역시는 더 많은 권한과 지원을 받은 반면, 기초자치단체는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 정부는 특레시 명칭만 부여할 것이 아니라 특레시에 걸맞는 모든 혜택과 지원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처럼 기대와 문제점이 산재해 있는 특레시 출범을 앞두고 정부 역시 시행령 제정에 많은 고민과 걱정을 하고 있을 것이다. 전국 특레시시장협의회가 출항했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아직 아무것도 없으며, 정부로부터 답변을 받아 낸 것 또한 없다.

지난 7월 19일, 4개 특레시 시장들이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많은 이야기가 오갔다고 한다. 특레시 출범 지원을 위한 전담 기구가 이제 설치된 것은 낮은 감이 있지만, 앞으로 더 진전이 있을 것이라 기대해 본다. 곧 제정될 시행령에 4개 특레시에 대해 어떤 권한과 혜택이 주어질지는 누구도 장담을 못하므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실질적인 행정수요 재정을 통한 특레사무 이양에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랄 뿐이다.

2022년 1월 13일, 특레시라는 출발점에 선 창원시 지방분권과 국토 균형발전을 상징하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로, 주민 중심의 신 지방자치시대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살기 좋은 내서, 살고 싶은 내서, 내서로 오세요



진상락 의원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의식주(衣食住)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세 가지 기본 요소인 옷과 음식과 집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우리는 이것을 잘 누리기 위해 살아가고 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 변화되어가면서 대도시를 불문하고 아파트나 주택을 구매할 때 숲세권, 역세권 학세권은 중요한 조건이 되었다.

그 조건에 잘 부합되는 곳이 바로 내서읍이라고 단언한다.

첫 번째 교통면에서 사통팔달(四通八達)이다. 사방으로 통하고 팔방으로 달아있어 내서IC를 기점으로 창원, 함안, 군북, 의령의 산업단지로 출퇴근이 편리하며, 창원과 마산의 중심지로 접근성이 용이하며, 원거리 이동수단으로는 중리역과 내서터미널이 있다. 현재 내서에는 중리공단과 수곡공단이 자리하고 있고 평성에는 일반산업단지가 분양 중에 있으며,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농산물 유통센터가 있다.

두 번째 교육면에서의 학세권이다. 초중고 특히 내서 여고와 제일고등학교가 있으며, IT분야의 마산대학 창업보육센터를 자랑하는 마산대학교가 있다. 여가와 문화 복지면에서는 최근 오픈한 영화관과 웨딩홀 내서 스포츠센터의 수영장과 각종 프로그램, 의료부분에서는 종합병원인 청아병원이 있다. 2021년 8월 현재 인구는 약 63,820명이며, 내서읍은 도시와 농촌을 기능적으로 연계한 도농 복합연계도시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한다 “공기 좋고, 물 맑고 인심 좋은 곳에서 살고 싶다”라고.

무학산과 광려산의 품속에 둘러싸여 있으며, 내서읍을 관통하는 약 10Km의 광려천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는 1급수 하천이다. 광려천은 고향의 강 조성사업으로 인도와 자전거길로 나뉘어 꽃길과 사계절 내내 물이 흐르는 물길로 이어지며 특히 내서의 각 단체의 봉사활동으로 일구어낸 금계국과, 해바라기 코스모스 길에 전해주는 심리적 치유는 사람과 사람, 이웃과 이웃을 아우르는 건강의 길이며 우리 아이들과 우리가 살아가는 에너지를 만들어 주는 자랑거리이다.

우리가 살아가고 내 아이들이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꿈의 터전이 되어주는 내서,
물 맑고 건강한 에너지가 흐르는 살고 싶은 내서, 살기 좋은 내서에 여러분의 아늑한 보금자리를 만들어 보세요.



2021. 9. 10. 창원시보 제269호 게재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우리의 책임



박헌재 의원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창원시는 지난 7월 1일 창원시아동보호전문기관 개소식을 시작으로 창원형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들을 추진한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다.

아이와 관련된 안타까운 뉴스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요즘에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2019년 한 해 동안 아동학대 사례는 3만 45건으로, 2018년의 2만 4천 604건보다 22% 증가했다. 창원시의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9년 373건, 2020년 432건, 2021년 6월 말 현재 294건으로 매년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아동이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세상은 멀기만 하다.

아동에게 특별한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1959년 11월 UN 총회에서 채택된 아동권리선언(UN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과 1989년 11월 20일 아동권리협약이 만들어 졌다. 우리나라도 1961년 12월 30일 「아동복지법」을 제정하고 1991년 12월 20일에 함께 지키기로 약속하였고, 아동의 권리보장 및 아동학대의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행하여 왔다. 그러나 '원 가정 보호'에 치중하다 보니 학대행위는 여전히 가정 내부의 문제이자 훈육의 문제로 취급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가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거나 잘못된 행동을 한 경우에는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아이에게 가하는 폭력을 정당화하는 경우를 쉽게 발견하기도 한다. 이런 아동학대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방치한 탓에 딸에게 쇠막대기·효자손 등으로 폭행하고, 달궂힌 프라이팬에 손가락을 지닌 학대 사건, 40대 계모가 의붓딸 B양(13)을 2시간 가량

폭행해 사망케 만든 사건 등 사람이라 할 수 없는 아동 학대 범죄가 일어 나고 있다.

아이에게 잠깐 관심이 아닌 지속적인 안전감을 주도록 부모나 양육자, 아동 관련 업무 종사자가 아동 특성이나 위험 상황을 제대로 인지할 수 있는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 위험에 노출된 아동을 조기 발견과 현장 중심의 아동학대 예방으로 아이의 심리적 불안감의 그 슬픈 애착이 또 대물림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

가정에서는 더 따뜻하게 아이들을 대해주고 이해해 주는 것이 아동학대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기본임과 동시에 가정 외에서는 아이를 함께 키워가는 것임을 알고, 아동의 기본권리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보장하여 건전한 사회공동체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과 시의회 등의 존재 목적에 맞게 어떤 역할이 있는지 생각해 본다.



청년 사업가 33인의 용기 있는 행동을 지켜보고서



주철우 의원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지난달 26일에 경남 도의회 앞에선 조그마한 지지 선언 행사가 있었다. 내년 대선 후보 중 한 명에 대한 지지 선언이다. 내가 주목했던 건 그들이 청년이지만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나는 정치에 입문한 지가 20년이 되었는데, 사업하는 사람은 좀처럼 앞에 나서길 꺼려 하는 걸 잘 알기 때문이다. 잘 알다시피 괜히 나섰다가 사업에 영업에 지장이 있을까 봐 거의 다 몸을 사린다. 그래서 난 가슴 뭉클했고 이 청년들에게서 희망을 봤다. 그들의 앞 뒤 재지 않는 용기에, 적극적인 참여에 박수를 다시 보낸다.

올해 나의 작은 아이는 2월에, 큰 아이가 8월에 차례로 졸업했다. 둘 다 코로나로 졸업식은 없었다. 그래도 작은 아이 때는 같이 사진 찍고 우리 네 식구가 모두 모여 조촐한 저녁 식사 한 끼나마 함께 할 수 있었는데, 큰 아이 때는 3명 이상 집합 금지라 그마저도 허락되지 않았다. 참으로 불쌍한 청년 세대들이다. 그나마 우리 집 아이들은 조그마한 직장이지만 취직을 해서 다행이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는 청년들을 생각해본다. 과연 그들에게 지금 제일 절실한 게 뭘까하고, 그래서 물어보니 안정적인 수입이 있는 직장, 주거란다. 쉽지 않은 과제다. 당장 어찌지도 못하고, 하지만 하나하나 차분하게 풀어가자. 청년들이 구직 활동을 하는 동안 지쳐 쓰러지지 않게 사회적 안전판인 청년 배당을 통해 지원하자. 주택 공급 면에서는 청년들을 위해 저렴한 소규모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더 이상 청년들이 고시원과 반 지하방을 전전케 하지 말자.

처음 의원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16년경이다.

창원시 인구 정책을 담당하던 과장에게 앞으로 출산율이 자꾸 줄어 인구 감소가 불을 보듯 뻔한데 무슨 대책이 있는가 물었다. 대책이 있다고 했지만 가져온 서류에는 고민의 흔적도 아무런 내용도 없었다. 이제 서야 창원시는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고 난리다. 씁쓸하다. 그때부터 청년들이 살기 좋은 창원을 만들어야겠다 생각하고 준비했다면 어땠을까 생각해 본다. 그랬다면 인구 감소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았을까?

난 괜찮은 청년이 의회에 더 많이 들어오고 창원시에도 넘쳐나길 희망한다. 왜? 난 그들에게서 미래의 희망을 보기 때문이다



2021년도 회기 운영 일정

월별	회 별	회 기	주 요 처 리 안 건	비 고
1월	제101회 (임시회)	1. 18.(월) ~ 1. 19.(화) (2일간)	• 조례안 등 기타 안건처리	
3월	제102회 (임시회)	3. 9.(화) ~ 3. 18.(목) (10일간)	• 조례안 등 기타 안건처리 • 시정질문 • 행정사무감사 사전준비 (시기, 계획) ※ 결산검사위원 선임	대마도의 날 조례 제정 기념일 3. 18.(목)
4월	제103회 (임시회)	4. 21.(수) ~ 4. 28.(수) (8일간)	• 조례안 등 기타 안건처리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 4. 5.(월)~4. 24.(토)
5월	제104회 (임시회)	5. 25.(화) ~ 5. 28.(금) (4일간)	• 제1차 추경안 처리	
6월	제105회 (제1차 정례회)	6. 7.(월) ~ 6. 30.(수) (24일간)	• 행정사무감사 • 2020회계연도 결산, 기금, 예비비 승인 • 조례안 등 기타 안건처리 • 시정질문	대마도의 날 기념일 6. 19.(토)
7월	제106회 (임시회)	7. 15.(목) ~ 7. 22.(목) (8일간)	•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 조례안 등 기타 안건처리	창원시민의 날 기념식 : 7. 1.(목)
8월	하 계 휴 가			
9월	제107회 (임시회)	9. 6.(월) ~ 9. 15.(수) (10일간)	•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처리 • 시정질문	추석연휴 9. 19.(일) ~9. 22.(수)
10월	제108회 (임시회)	10. 21.(목) ~ 10. 27.(수) (7일간)	• 조례안 등 기타 안건처리	마산국화축제 10. 27.(수) ~11. 7.(일)
11월 ~ 12월	제109회 (제2차 정례회)	11. 25.(목) ~ 12. 20.(월) (26일간)	•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 2022년도 예산안 •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조례안 등 기타 안건처리 • 시정질문	

※ 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창원시 현재 인구 10.24.기준

2020년 대비
1,033,808명(2,930명 감)

인구는 도시의 경쟁력!

창원愛 살아요



창원시의회 통권 제37호

발행인 | 창원시의회 의장

발행처 | 창원시의회 사무국

제작부서 | 창원시의회 의회홍보담당

발행일 | 2021년 10월

주소 |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의회

전화 | T.055)225-5334

※본 책자는 배포용이 아니오니 보신 후 제자리에 비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 원 시 의 회

<http://council.changwon.go.kr>